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광주대단지와 도시의 미래

일시 : 2021년 7월 6일 (화), 14시
장소 :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
주최 : 성남시, 국토연구원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이라는 도시를 태동하게 만든 광주대단지 5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여래 내외빈을 모실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조명래 前 환경부 장관님, 공동주최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에 참여해주신 임미리 박사님, 김민환 교수님, 박세훈 선임연구위원님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해주신 하동근 위원장님, 이상대 선임연구위원님, 김영백 교수님, 정상훈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1971년 8월 10일에 울려 퍼졌던 수만여 시민의 함성 속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유산이 있습니다. ‘먹고 살게 해달라’, ‘일자리를 달라’, ‘제대로 된 집과 도시기반시설을 달라’, 이는 인간의 존엄을 위한 시민의 당연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군사독재정권, 서울시를 비롯한 당시 행정당국은 불순한 폭력시위와 폭동, 난동으로 평가절하했으며, 사건 가담자들을 오랜 기간동안 사찰하고 탄압하기까지 했습니다. ‘단지’에서 ‘도시’로, 성남이라는 도시가 태동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사건에 대해 말하길 꺼리고 부끄러운 역사로 치부했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도시 철거민들과 전국 각지 사람들이 이주해 시작된 우리 성남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볼 수 있는 도시로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수정-중원의 원도심과 분당-판교, 위례신도시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성남시의 위상과 그 에너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도시로 불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 최상위권 도시,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교통이 복지인 도시, 청년과 아동을 위한 도시,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도시, 어르신들을 존경으로 모시는 도시, 1인 가구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도시를 바탕으로 성남의 미래 50년을 착실히 준비해나가는 그 역사적인 걸음에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도시에 대한 권리’ 관점에서 1971년 시민의 목소리를 재조명해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편익을 누릴 권리, 도시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또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 갈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람이 존엄하고 존중받는 성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이정표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념사업추진위원장 하 동 근

광주대단지 사건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의 역사는 민간영역에만 국한된 역사로 치부되어왔습니다. 성남시의 역사로 승인되지 못했고 외면 받아 왔습니다. 사건의 효과로써 탄생한 도시였음에도 제 자신의 역사로 당당하게 내세우는데 주저해왔습니다. 이는 사건의 내용과, 형식으로서의 이름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의미인 기의에 기반하여 기표가 정해지기보다는 사건의 외적형식에서 즉자적으로, 즉 변증법적 거리 없이 기표가 외부적이고 강제적으로 책정되어버린 사실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기의에 어울리게 기표가 정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기표가 의미를 생산한다는 기표 우위를 강조하는 정신분석학자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기표가 의미를 제한하고, 사실을 감추고, 팩트를 왜곡하는 일들이 요즘에는 일상적이고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사건의 왜곡된 의미가 도시민과 도시를 소외시키고 행동을 제한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사건의 기표(이름)를 특정 하는 일은 일단 유보하고(일단 8.10광주대단지 사건이라는 가치중립적 이름으로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좀 더 힘 있고,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참여가 이뤄진 환경에서 의미와 이름을 도출해보자고 제안되었습니다. 이런 신중함은 잘못된 보편화가 사건의 주체들과 사건의 의미를 이중으로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또한 성급한 역사화는 사건의 중핵을 은폐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50주년은 유보해왔던 작업을 풀어낼 시간적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발 더 나아가 사건이 현재까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내고, 함께할 기억을 바탕으로 도시의 미래를 꿈꿔보자는 생각들이 모아져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지난한 일이 될 것이다.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기획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프로세스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권이라는 틀로서 사건을 분석하고 실천의 지점들을 모색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조명래 전 장관님과 사건을 기념하는 일반적 모델을 통하여 기념의 방향을 모색해주실 김민환 교수님, 사건의 성남 지역적 의미를 중심으로 재정리해주실 임미리 박사님, 그리고 공간정책과 사람이라는 자산을 통하여 갈등을 넘어 포용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주실 박세훈 선임 연구위원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실 강현수 원장님, 김백영 교수님, 이상대 박사님과 정상훈 교수님께서 이러한 중책을 맡아 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광주대단지와 도시의 미래

기조연설

도시권리운동으로서 8.10 성남대단지 사건의 정체성과 유산

조명래 명예교수 (전 환경부 장관)



도시권리운동으로서 8.10 성남대단지 사건의 정체성과 유산¹⁾

조명래(단국대 명예교수, 18대 환경부 장관)

1. 8.10 성남대단지 사건에 대한 해석의 흐름

8.10 성남대단지사건(이하 8.10사건)은 군부독재시절, 지배세력들이 초기 도시산업화의 계급적 모순들을 도시계획이란 공간생산의 수단을 이용해 해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온전한 도시적 생존권을 이중적으로 (구도시와 신도시에서 동시에) 박탈당한 정착지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도시저항운동이다. 그 결과로 성남이란 주변부 도시를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운동이란 게 8.10사건의 본질이다. 그러나 군부독재정권에 대한 도전의 의미마저 띠었던 8.10사건은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만큼, 그 동안 다양한 명칭으로 8.10 사건에 대한 성격이 규정되어 왔다. 성격규정이란 곧 8.10사건에 대한 의미해석을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주요 해석들은 특정 관점에 의거해 왔다는 점이다.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성격이 규정되어 왔지만, 그간의 의미해석은 주체 대 타자의 관점, 약자 대 강자의 관점, 긍정적인 측면 대 부정적인 측면 등 일련의 이분법적 입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8.10사건의 호명이나 성격규정은 결국 특정 시대, 특정주체, 특정정파, 특정이익, 특정이념, 특정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기존 해석들이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주체·정파·이익·이념·가치관의 관점에서 새로이 해석되어야 할 여지를 남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8.10사건은 1971년 8월10일부로 종결되었지만, 그 의미해석은 여전히 미완이고 새롭게 시도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8.10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해석투쟁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올바른 해석투쟁은 변증법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8.10사건을 새롭게 해석하려면, 기존 해석에 대한 재해석을 먼저 해야 한다²⁾. 그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기존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고 보완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다. 기존 해석은 어떤 방식으로든 특정 관점에 닫혀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닫힘을 여는 게 새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8.10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석은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간헐적으로나마 계속 되어 왔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8.10사건 30주년(1991년)을 맞이하여 ‘8.10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8.10(광주대단지사건) 30주년 기념 심포지움’의 발표 글, 2004년 성남문화원이 주최한 ‘제9회 광주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 2011년 출간된 한국공간환경학회의 <<공간과 사회>> 제21권 4호의 특집 (성남 대단지 사건의 재조명) 글, 김원, 임미리 등(2020) 등의 <<성남대단지사건 학술연구>>의 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1) 이 글은 2011년 필자가 발표한 ‘8.10 성남대단지 사건의 재해석과 성남 도시정체성의 모색’의 일부(3장, 4장, 5장)를 발췌하여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론을 도입해 발전시킨 것이지만 미완결 상태를 밝혀둔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줄고 ‘8.10 성남대단지 사건의 재해석과 성남 도시정체성의 모색’을 참고할 것.

글들에서 8.10사건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집약되어 있다. ‘난동’, ‘항거’, ‘항쟁’ 이 그러하다.

8.10 사건에 대한 기존 해석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해석의 흐름에서는 두 가지 경향이 확인된다. 하나는 부정적 해석에서 긍정적 해석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자와 체제의 관점에서 주체와 지역의 관점에 의한 해석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현실의 지배적인 해석 방식과 견줄 때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다. 이는 사건이 갖는 정치적 강박성과 폭력적 외형성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러면서 사건의 내면적 동기와 주체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모티브(motive)가 풍부해진 결과로 여겨진다. 이 글은 해석의 이러한 전향적 흐름을 모아 낸다면 8.10사건을 ‘도시(에 대한) 권리운동’ 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개된다. 이는 항쟁으로서 해석을 보다 적극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앙리 르페브르와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권리)

‘도시에 대한 권리(Rights to the City)’ 는 프랑스 공간철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창안한 실천적, 이론적 개념이자 그의 저서 제목이다. 앙리 르페브르(1901-1991)는 60여권의 책과 300여 편의 논문을 남긴, 프랑스의 대표적인 맑스주의 이론가이자 실천가이다. 공간(환경)의 문제를 맑스의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읽고 해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진보도시학(radical urban studies)’ 은 르페브르의 도시연구에서 비롯됐다. 그는 평생 동안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헤겔의 변증법, (헤겔과 니체를 바탕으로 한) 맑스주의 이론/실천, 소외, 일상생활, 도시, 공간, 국가, 리듬 등 다양한 이론적 주제를 다루고 또한 이를 변혁적 실천으로 옮기고자 했다. 그의 평생 연구 테제에서 ‘도시’ 에 관한 연구는 나이가 60이 넘어 대학교수가 된 이래 10여간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도시 관련 7권의 책을 썼다. ‘코뮌선언(1965)’, ‘도시에 대한 권리(1968)’, ‘농촌적인 것에서 도시적인 것으로 (1970)’, ‘도시혁명(1970)’, ‘맑스즘과 도시(1972)’, ‘공간의 정치(1973)’, ‘공간의 생산 (1974)’ 등이 그러하다.

이 중, 맑스의 자본론 출간 후 100년이 되던 해(1968년)에 출판된 ‘도시에 대한 권리’ 는 도시를 통한 실천과 변혁을 위한 지침이자 이론적 근거로 쓰인 것으로, 실제 그 해 일어난 이른바 6.8사건(소르본 대학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프랑스 관료적 사회의 문제를 혁파하고자 하는 문화혁명운동)의 운동교본이 되기도 했다.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프랑스(유럽) 자본주의는 국가를 경영하는 기술 관료들의 기획과 개입(예, 정책, 광고 등)을 통해 생산영역을 넘어 재생산(일상생활, 소비부문)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자본축적의 축수(이윤창출, 가치실현)가 도시공간으로 전면 침투하게 된다. 이로써 사회전반이 이른바 ‘관료적 소비조작 사회’ 로 바뀌는 것과 함께 일상세계와 그 터전인 도시공간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침윤된 내국적 식민지로 바뀐다. 도시는 자본순환 과정에서 생겨난 잉여가 축적되는 장(제2 순환영역이라 부름)으로 재조직되고 부동산 투기와 개발을 통한 공간의 상품화가 더욱 촉진된다. 도시(공간)는 이로써 사용가치의 공간에서 교환가치의 공간으로 변하면서, 도시의 일상과 그 리듬은 이러한 공간의 상품화 흐름에 포섭되고, 도시거주자들은 사회적 과정과 일상생활로부터 탈주체화와 소외를 겪는다. 이러한 도시적 사회로의 전환은 도시의 공간적 형태와 질서마저 바뀐다. 도심부는 지배부문, 이를테면, 통치행

정, 기획, 금융, 유통소비 등과 관련된 지배계급의 공간으로 편성되는 반면, 주변부는 도시 하층민들(특히 노동자)이 도시의 외곽이나 국가가 건설하는 신도시로 옮겨감으로 배제계급의 공간으로 조직된다. 중심부-주변부의 공간 배열 속에서 주변부 하층민들은 도시중심부(중심권력과 중심가치)로부터 더욱 멀어지면서 공간을 통한 소외와 박탈을 겪는다.

르페브르는 자본주의적 도시화에 따른 모든 문제 중에서 ‘소외’를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로 여겼고, 이는 그의 평생 연구 및 실천 테제가 되었다. 40, 50대 동안 그는 일상생활을 통한 소외의 양태와 문제를 읽어내고자 했다면, 60대 들어 도시문제(도시의 소외)를 연구주제를 다루면서, 그는 도시공간(생활세계의 확장)을 읽는 대상으로서 아니라 소외극복을 위한 실천의 장으로 접근했다. 말하자면, 앞서 서술한 자본주의 도시화의 문제를 도시의 주체들이 자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관점(도시를 이상향으로 바꾸려는 관점)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창하게 된다. ‘도시에 대한 권리’에 관한 논의에 앞서, 그는 1960년대 초부터 ‘국제상황주의자’들과 함께 도시변혁의 실험을 시도한 바 있다. 국제상황주의자들은 도시의 특정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거대 모순을 짚어내고, 이를 게릴라 전투방식으로 뒤튼고 파괴하는 식으로 도시변혁을 시도했다. 관료적 소비조작 사회에서 굳어진 도시의 일상리듬, 즉 무료하게 반복되는 선형적 리듬을 자의식적으로 깨고 들어가, 그 속에 은닉된 자본주의의 거대한 모순들을 들춰내어 이를 교란하면서 재질서화해 주체적인 순환리듬으로 되돌려 내하고자 했던 게 도시변혁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이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신바빌리온의 건설’이라 불렀다. 르페브르는 상황(situation)의 설정을 ‘순간(moment)’의 포착으로 다루었다(moment는 르페브르의 평생 연구주제 중 하나). 순간의 포착을 통해 모순의 ‘구체적 총체성’이 드러나고, 이의 전복이 곧 르페브르식 변혁이다(이는 구조전환을 지지하는 구조주의 맑스주의자들과 다른 점). 그의 이러한 변혁적 실천은 맑스주의에 니체주의가 결합된 것으로 생동적이고, 시적이며, 유희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식의 변혁을 르페브르는 ‘축제적 혁명(festive revolution)’이라 불렀다. 하지만, 르페브르는 국제상황주의자들의 실천과 실험은 편협하고 비본질적이라고 여겼다. 좀 더 광역적이면서 근본적인 실천(계급 주체적 실천)의 방식을 찾는 가운데, 르페브르는 1781년의 ‘파리 코뮌’운동을 주목하게 된다. 당시 나폴레옹 3세가 무모하게 (비스마르크 집권 하의) 독일과 전쟁을 일으켰지만 독일군의 반격으로 파리가 오히려 점령되었다. 하지만 파리시민들은 프랑스 국방군의 도움 없이 주체적으로 파리를 지키면서 약 70여 일 간의 개혁적 코뮌자치를 실시했다. 이 개혁적 자치(혁신자치의 원조)를 주도한 세력은 오스만 시장이 추진한 파리 대 개조 시에 변두리로 쫓겨난 하층 노동자들이었다. 쫓겨난 도시중심부로 돌아온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도시란 작품을 탈환하고자 했던 것이다. 후에 르페브르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자주관리’란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의 새로운 ‘주체적, 자율적 정치적 실천 양식’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해석과 실천의 이면엔 자본주의란 시스템에 의해 식민화된 도시의 일상세계를 온전한 주체적 삶터로, 즉 하이데거식 ‘존재’의 복원으로 재설정하는 철학적 관점이 깔려 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사유와 실험 끝에 나온 것으로, 변혁의 주체로서 도시주체들의 자의식 실천을 부추기기 위한 일종의 이론적 지침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후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1970년의 ‘공간의 정치’(도시에 대한 권리, 제2부로 부르기도 함)를 통해 더욱 발전시킨 뒤 1974년의 ‘공간의 생산’을 통해 공간이론과 공간실천을 메타이론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이렇듯 르페브르가 제창한 ‘도시에 대한 권리’는, 책에서 논의되는 것으로만 보면, 추상성이 높은 철학적 의미를 담지한 개념이다. 적용과 실천을 위해선 다면적 해석과 구체제도와 연결에 대한 고민을 별도로 필요로 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권리나 권리 행사에 대한 엄밀한 법률적 해석이나 사회과학적 분석기준의 적용을 통한 맞다, 틀리다 식의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전제 하에서, 아래에서는 강현수(2010)가 분류한 유형을 기초하여 (르페브르의 책에선 이런 식 유형화가 안 되어 있음) ‘도시에 대한 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의 유형화(구체화)는 8.10사건에 대한 포괄적 해석을 돕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첫째, ‘작품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이다. 작품(oeuvre)은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과 대조된다. 인간의 집합적 노력을 통해 창출된 문명적 가치가 배태되어 있는 온전한 도시는 그 자체로 복제할 수 없는 작품이다. ‘교환가치의 공간화’, ‘공간의 상품화’ 등에 의해 구조화된 현대 도시는 더 이상 작품으로서 도시가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구축되어 온, 더불어 살아가는 주체적이고 온전한 삶의 장으로서 도시(온전한 도시)를 작품으로 되돌려 내고, 이를 도시 주체들이 향유할 권리가 도시거주자에게 있다는 게 르페브르의 주장이다. 나이, 성별, 계층, 인공, 국적,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나 배제 없이 도시거주자(이용자 포함)라면 누구나 도시라는 인간의 집단적 작품을 함께 향유할 권리가 있다(강현수, 2000: 12). 작품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유에 대한 권리, 개인화에 대한 권리, 거주에 대한 권리 등의 상위 형태의 권리로서, 여기엔 전유와 참여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는 게 르페브르의 생각이다.

둘째, ‘(도시에 대한) 전유의 권리’이다. 전유(appropriation)는 사유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교환가치의 공간을 사용가치의 공간으로 도시를 바꾸어 함께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전유의 권리는 도시란 공간을 타자(배타적 소유권자)나 객체(자본, 상품) 의해 소유됨으로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도시의 삶을 복원하고 향유하는 권리가 된다. 사용가치의 공간으로서 도시공간의 (재)전유는 온전한 존재의 설정이란 하이데거(Heidegger)의 철학적 명제를 담고 있다. 따라서 도시에 대한 전유의 권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인 식수, 먹거리, 위생에 대한 권리 뿐 아니라, 적절한 주거환경, 직업, 안전, 교통, 의료, 복지, 교육 등에 대한 파편화되고 구체화된 권리를 망라하는 집합적 권리인 셈이다.

셋째, ‘(도시의 조성관리에 대한) 참여의 권리’이다. 이는, 도시의 일상생활로부터 도시의 정치와 행정 등에 대한 도시 거주자들이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참여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것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사안 등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 집행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참여여야 한다. 참여의 권리는 따라서 상품화되고, 객체화된 ‘소외의 도시’를 일상리듬이 살아나고 주체화된 ‘소속의 도시’로 만들어내는, 즉 도시공간의 생산에 대한 권리가 된다. 도시조성에 대한 권리로서 참여의 권리는 르페브르에게 모순의 도시를 저항하면서 온전한 주체의 도시로 바꾸는 도시변혁에 대한 권리이기도 하다.

넷째, ‘도시 중심부에 대한 권리’이다. 르페브르에게 도시의 중심부, 즉 중심성은 도시의 모든 것이 응축된 것이다. 오랜 시간을 걸쳐 생산된 작품으로서 도시의 중심부가 없거나, 있지만 접근이 차단이 되면, 도시와 도시의 삶은 온전할 수 없다. 중심부로부터 배제는 도시에서 집단, 계급, 개인들이 배제되는 것이고, 또한 이들을 문명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라고 르페브르는 보고

있다. 중심부는 산재한 도시주체들이 만나고 소통하며 함께 결정하면서 도시의 문명적 가치를 공유하는 장으로서 아테네의 아고라에 견주어진다. 따라서 신도시 건설과 같은 도시공간의 확장에 의해 주변부로 쫓겨난 도시약자들(특히 노동자 등 도시하층계급)의 중심부로의 (재)접근과 복귀는 도시 삶의 관계적 망 혹은 흐름 속으로 다시 결합되는 것을 뜻한다.

다섯째, ‘차이의 권리와 정보의 권리’ 다. 이는 르페브르가 다원화된 정보사회를 염두에 두면서 후에 추가한 권리로서, 다름을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면서 도시의 다양한 삶의 기회(정보)와 영역에서 일상활동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자유롭고 공평하게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시거주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가 도시의 시간과 공간 이용에 대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도시공간이 자본(논리)의 지배를 받는 추상공간으로 획일화되는 것에 대한 저항과 대안으로, 르페브르는 도시거주자들이 도시공간을 생동공간, 구체공간, 차이공간으로 재전유해 향유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섯째, ‘도시거주자의 권리’ 이다. 도시화가 전면화 된 사회에서 도시거주자는 더 이상 국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권리, 즉 시민권자로만 간주되어선 안 된다. ‘도시적 사회(urban society)’에서 생산자이자 소비자이며 이용자로서 다원적 소속감을 갖고, 또한 그에 상응한 권리 향유자가 곧 도시거주자의 권리다. 현대 도시(공간)은 파편화된 거주처로만 기능할 뿐,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관계를 유지하는 거주 의미와 기능을 갈수록 상실하고 있다. 르페브르가 말하는 도시거주자는 단절되고 소외되며 객체화된 시민권자에서 벗어나 타자와 연대하고 소통하며 함께하는 도시적 사회의 능동적 권리주체로 재탄생한 것이다. 도시거주자의 권리는 그래서 도시를 작품으로 향유하고, 도시공간을 (재)전유·재창조하며, 주류의 도시적 삶에 결속되어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하는 것으로 행사된다.

3. 도시권리의 관점에서 본 성남 대단지 건설과 8.10사건

3.1 도시건설을 통한 국가 지배와 ‘단지도시’의 비정상성: 도시권리가 거부된 도시의 모습

8.10사건의 기본성격은 도시 철거민을 강제 수용시킨 후 도시를 급조한 결과, 불완전한 삶터에서 겪는 생존권 박탈에 대해 빈민 이주자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면서 이의 시정을 폭력적으로 요구한 대규모 시위(항쟁)란 것이다. 난동 혹은 폭력적 시위는 항쟁의 외형에 해당하고, 그 실체는 삶터에서 박탈당한 생존권의 보호와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시에서 누구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인 ‘도시(에 대한)권리’의 쟁취가 8.10사건의 핵심적 실체이고 그 밖의 현상적 기호들(폭력 등)은 부차적인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쟁점이 ‘새 도시 만들기’(신도시 건설)란 국가에 의한 공간생산의 과정에서 불거졌고, 이 점에서 8.10사건은 다른 일반적인(비공간적) 항쟁 혹은 사회운동과 구분된다. 비록 새 도시(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공간적 상황에는 공간의 생산자로서 군부독재란 국가권력과 이에 맞서는 공간의 소비자이자 도시권자인 하층 주민이 대칭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이 관계는 공권력으로 추진되는 도시건설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지배와 피지배 혹은 통제와 피통제란 역학관계를 내부화하고 있다. 8.10사건은 이 역학 관계가 갈등적이고 대항적인 것으로 급속하게 변질되면서 파열한 모습이다. 이 파열은 도시에서 누려야 할 온전한 삶의 권리, 즉 도시권리의 총체적 박탈에 대한 폭력적 저항이면서 이의 쟁취를 시도하는 운동형식이다.

국가와 주민의 역학관계가 도시 만들기란 공간적 과정 속에서 과열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건설되는 공동체의 삶터가 ‘정상 도시(normal city)’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현격하게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해 급조된 성남대단지는 실제 ‘집단 수용소’와 같은 것으로 도시계획(국가행위)을 통해 조성되는 일반적(계획적) 신도시와는 너무나 달랐다. 국가에 의해 조성된 신도시의 이러한 비정상성(예, 빈민 하층민의 집단거주, 천막주택, 무허가주택, 도시 인프라 부족, 생산(고용)기반의 결여, 등)은 온전한 거주를 불가능하게 한 까닭을 말한다. 비록 인공도시이긴 하지만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일반적인 신도시와 달리, 성남 대단지는 도시다움의 최소 요건마저 갖추지 못한, 외형적으로 보면 철거민의 집단 수용소에 불과했던 것이다. (신)도시를 유토피아³⁾적 ‘작품’으로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는 온전한 삶터로 ‘전유’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도시계획적 작업이나 이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없었다. ‘허허 별관에 버려진’ 이주자들(철거민, 매입입주 등)의 삶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답게 살 기본적인 권리⁴⁾ 자체가 근원적으로 박탈당한 그 자체였다.

도시 만들기가 이렇게 기형적이면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이를 담당한 국가권력이 군부독재정권이란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1971년 8.10사건이 터질 무렵,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로 전환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있었다.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권은 군부(정치인), 재벌, 관료 간 계급적 연합을 통해 경제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 민중의 요구와 저항을 철저히 배제하고 억압하는 통치를 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국가주도의 산업적 근대화의 핵심적 과정을 공간적으로 담아내는 곳으로 기능했다. 군사정권의 국가권력은 전체사회 수준에서는 축적 혹은 생산영역(산업, 자본, 노동, 시장)을 직접 통치하는 것으로 작용하지만 서울과 같은 도시수준에서는 군부정권의 대리인(즉, 군인 출신 시장)을 통해 재생산(생활, 소비 등)영역을 관리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1966년 취임한 김현옥 서울시장(1966-70)은 국가주도의 산업적 근대화를 공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도시개조를 전면적으로 단행했던 군사정권의 대표적인 대리인 시장이었다. 그는 여의도개발, 청계천복개, 세운상가 건설, 시민아파트 건설 등 서울의 근대화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저돌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서울인구 3분의 1이 거주하던 무허가 주거지를 대규모로 철거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병행 추진했다. 도시계획의 운용에서 전자는 포섭의 방식으로, 후자는 배제의 방식으로 작용했다. 후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적 차원의 기층민중의 억압과 배제란 체제 수준의 모순은 도시차원에서 빈민 주거지의 철거와 빈민의 강제이주와 같은 구체 현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남대단지를 인구 50-60만을 수용하는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만이었다. 도시하층민을 불법거주자란 이유로 불법적(하층민의 주거인권의 박탈 등)으로 이주시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기에, 이주자를 위한 대체공간으로서 신도시의 건설에 대한 청사진의 작성과 건설노력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작품과 전유’에 대한 거주자의 권리가 박탈되고 부재한 상황에서 ‘강제 이주와 정착’이란 대체공간에 대한 권력 작용만 있었다.

3) 모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의 동원으로 추진된다. 도시계획에서 비전과 목표의 설정은 늘 현실의 문제가 해방되는 나름의 이상향(혹은 이상적 목표)을 표방한다. 신도시 계획일수록 이러한 유토피아적 비전과 목표의 색채는 더 뚜렷하다.

4) 현행 헌법 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2 군사 독재식 도시계획과 사회 배제계급의 공간적 집단화: 도시권리 부재와 박탈의 과정

도시계획은 중앙정부의 근대화 정책들을 도시공간에 옮겨내는 정책도구이자 제도다. 한국에서 정상적인 도시계획은 1962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절차로 추진된다. 그러나 독재정권 하에서 도시계획제도의 실제적 운용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이며, 때론 탈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일쑤였다. 1967년 7월18일 김현옥 서울시장은 23만여 동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여기서 발생한 철거난민 127만 명을 서울시 밖 2-3개 대단지에 나누어 수용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듬해 그는 관할권 밖인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 10만5천 가구 50-60만 명이 정착할 300만평 규모의 ‘성남대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했고, 1969년 5월2일 철거 이주민 48세대 154명을 트럭으로 싣고 와 떨어뜨려 놓으면서 단지조성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했다. 성남대단지 조성의 이러한 과정은 군사독재 하에서나 가능한 독단적·탈법적 도시계획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니 도시조성의 결정으로부터 추진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예, 계획안의 공론화, 계획결정의 자문, 주민제안 등)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도시권리의 중요한 부분인 ‘(도시조성에 대한) 참여의 권리’ 부재나 배제는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답지 못하게 하고 신도시를 정상도시로 조성하지 못하게 한 까닭이 된다.

당초 광주대단지는 최초의 수도권 위성 신도시로 구상되었다. 저렴한 토지확보를 위해 경기도 광주군 구릉지⁵⁾에 터가 정해지자, 도시계획법 적용이 가능한 ‘성남출장소’란 임시행정단위(시·군 수준)가 먼저 설치되었다. 인구 50-60만 명을 수용할 단지도시의 건설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고 조성방식은 당시 도시계획법상의 ‘일단지(一團地) 주택경영사업’ 방식을 적용하여 ‘주택도시’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는 어디까지 개발방식일 뿐, 체계적인 도시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계획에 준하는 도시비전이었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 자립도시’ 된다는 상식적 믿음뿐이었다. 실제 개발은 ‘입주 후 도시 건설’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다 보니 1969년 3월 개발공사가 착수되고 5월에 첫 철거민이 입주할 때까지도 구체적인 예산내역마저 나와 있지 않았다. 도시계획의 기본인 ‘법적으로 요구되는 적정’ 인프라의 사전적 공급 없이 철거민들을 먼저 입주시킨 후 필요한 인프라를 후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던 것이다. 지금의 합리적 도시계획제도로선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공공편익시설이나 산업 및 고용시설 등의 설치 방침은 있었지만 공공투자에 의한 공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8.10사건이 발발할 무렵까지만 해도 수도, 전기, 전화,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은 계획량의 20%만 공급되어 있을 정도였다⁶⁾. 공공이 담당해야 할 도시개발의 부분은 입주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실제 이주가구에 대해 20-40평의 땅(분양딱지)을 후불 조건으로 나누어 준 뒤 알아서 집을 짓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토지비용이나 인프라 설치비용을 충당한다는 명분으로 당국은 수용한 토지를 유보지로 묶었다가 고가로 되파는 경영방식에 강하게 집착했고 건설과정에서 실제 엄청난 개발

5) 구릉지를 선택한 것은 땅값이 쌀 뿐 아니라 건축법에 어긋나는 주택지대가 형성돼도 개방된 다른 지역에 비해 문제성이 적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상진, 1992: 71).

6) 광주대단지조성계획이 발표된 지 4년째인 1971년 6월 현재 대단지 건설의 실적은 다음과 같았다. 35만 명으로 잡았던 철거이주민은 11만 4,860명이 옮겨와 41%의 추진도를 보였다. 또한 토지매입과 택지조성은 각각 55%, 53%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군에서 천호동에 이르는 길은 완공되었지만, 광주군 내 도로 포장은 12%에 그쳤다. 상수도, 전기설비의 설치도 부진하여 각각 17%, 16% 밖에 진척되지 못했다. 공장은 100개 계획에 49개를 가동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나, 고용인원은 3%만 달성되었을 뿐이다. 학교 유치도 초등학교 30%, 중학교 25%라는 낮은 추진율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볼 때 광주대단지 사건 직적까지 서울시는 수입의 원천이 되는 택지조성에만 신경 썼을 뿐, 나머지 생활하부시설이나 주민의 고용·교육대책은 등한시했음을 알 수 있다 (한상진, 1992: 73).

이익을 남겼다⁷⁾. 이러한 도시건설의 방식은 도시건설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도시의 공공서비스의 향유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 온전한 삶터로서 조성은 도시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평하고도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는 것으로 구현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이 또한 거주자로서 입주자들이 누려야 할 도시권리(중심부에 대한 권리, 차이와 정보에 대한 권리, 거주자로서의 권리 등)가 부정되거나 박탈된 것의 결과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적 개발이익으로 도시를 건설(실제 부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이주자의 새 터전이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논리에 의해 침윤됨으로써 온전한 삶을 위한 전유의 공간이 될 수 없게 했다. 작품과 전유에 대한 권리의 박탈 혹은 부재는 도시의 혜택(공공서비스 등)을 실제 향유할 수 없는 또 다른 권리박탈의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근본적으로 권력기관인 국가가 입주자를 권리주체로 바라보지 않았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의 일반적인 도시계획의 눈으로 본다면, 50만 인구를 수용할 신도시를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탈법적이고 폭력적이며 반인간적인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싶다. 말이 공공에 의한 신도시 건설이지 수용된 빈민 약자들이 강제이주로 거주(도시권 박탈상태)하게 되면서 겪었던 삶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단지도시 건설 자체가 사실상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다를 바 없다. 이는 도시건설 초기의 제도나 정책역량 부족 문제로만 돌릴 수 없다. 서울 대도시 중심부에서는 도시의 신중산층을 위한 화려한 도시개조(예, 서울의 영동개발, 여의도 개발)가 근대도시계획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와 비교한다면 위성 신도시를 표방했던 성남대단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충족돼야 할 적절한 주거적 삶의 조건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임시수용단지에 불과했다. 이런 계획당국의 탈법성은 피계획 주체인 이주자의 권리 부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국가권력의 모순이 공간적으로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이는 단지도시의 공간 사회적 구성에 그대로 나타났다. 이후의 다른 신도시건설과 비교해도, 성남대단지 건설은 도시주체인 도시빈민층 거주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통제하는 계급차별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그 빈자리를 국가의 권력논리, 국가의 개발 논리와 방식(부동산 개발의 투기적 이익을 남기는 방식)이 채웠다.

서울의 빈민 철거민을 대규모로 이주시켜 단지를 채우는 바람에 경제적 자립력이 약한 빈민층 중심으로 인구구성이 이루어졌다. 1968년부터 3년 동안 12만 명의 철거민이 이주했다. 그러나 새 정착지에서 생존하기 힘들거나 집을 지을 여력이 없었던 이주자들은 분양짜지를 팔고 서울로 다시 돌아가거나 다른 빈민 이주자들과 함께 단지 내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아야 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땅을 받으면 떼돈을 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철거민들로부터 분양짜지를 매입해 정착하는 유형의 거주인구도 급격하게 늘었다. 실제 8·10사건이 터질 무렵 불법 전매된 분양권으로 이주한 가구가 단지 내 2만 1,372가구의 약 30%인 6,343가구를 차지했다. 강제철거 방식에 의해 빈민거주자들이 대량으로 생겨났듯이, 땅 투기를 통한 건설방식(즉, 후불방식의 토지분양과 유보지의 고가분양 등을 통해 창출한 개발이익으로 인프라 건설)으로 인한 전매 입주자의 급증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이 두 부류의 하층 거주자로 단지가 구성된

7) 광주대단지의 수입·지출계획에 의하면, 1969년 11월에야 56억 원의 예산을 확장하게 되는 데, 9억3천만 원에 들인 땅을 수용지·유보지·공장 부지·공공용지 등으로 54억 3000만원에 팔아 45억 원을 도로와 택지조성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부동산 붐으로 수입액이 증가가 예상되던 1971년 5월 서울시는 투자규모를 56억 원에서 93억 원으로 늘렸다. 예산규모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1969년 계획에서 17억6천여 만 원으로 책정했던 유보지 매각수입을 3배 가까운 50억2천여 만 원으로 높여 잡았다는 점이다(한상진, 1992:72).

것은 철거민 정착과 땅 투기방식의 토지조성으로 구성되는 탈법적 도시계획의 필연적 결과다.

1971년 8.10사건 발생 전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대단지엔 판자촌 철거민 2만1천372 가구의 10만여 명, 전매입주자 6천344가구의 1만4천여 명, 기타 전입한 사람이 2천950여 가구의 1만3천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앙일보, 1971.8.11., 한상진, 1992: 87에서 재인용)⁸⁾. 1971년 9월 경기도가 실시한 ‘광주대단지 행정기본자료조사’에 의하면, 이주민들 중 49.1%가 공사현장의 자유노동, 25.4%가 노점상·행상 등의 영세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상진, 1992: 85). 이렇듯 생계방식(직업)을 가지고 보면, 철거 이주자들은 대부분 하층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당시 전국 도시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4만 원이었는데, 성남대단지 가구 중 3만 원 이하가 96.4%였고, 이 가운데 면세점인 1만5천원 이하 소득인 가구는 24,821가구로 총가구수의 74.7%에 달했다. 1971년 당시 단지 내 30,771세대 가운데 공식적인 구호대상자만도 9,539세대로 약 31%를 차지했다. 노점상, 건설일용직, 영세사업체 종사자, 파출부 등 저임금 서비스 종사자, 마찰적 실업 등과 같이 불안정하고 생활의 안정성이 위협받은 사회의 하층부분에 취업해 자신의 생계를 도모하는 이런 유의 인구집단은 반프로레타리아 혹은 롬펜프로레타리아로 불려진다 (김동춘, 2001). 주류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주변화된 상태에서 불안한 생존권이 그나마 박탈당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들은 폭력적 저항을 쉽게 일으킨다. 이렇듯 말이 신도시이지, 단지도시는 국가주도적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빈민들을 서울 대도시로부터 분리해 집단화하는, 그래서 중심부 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공간적 장치였다. 사회적 배제계급으로서 이들은 사회적 불안국면에서는 저항적 일탈을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단지도시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깊숙하게 내부화하고 있었다 할 수 있다⁹⁾. 대단지의 이러한 조성상태는 서울 대도시 빈민들을 외곽으로 집단 수용하여 분리 배제시키는 계급차별적인 도시계획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로서 군부독재 정권 하의 권력모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제계급의 공간적 집단화는 도시하층민의 철거와 이주의 결과지만, 인간으로서 두려움, 또한 도시다운 도시로서의 조성을 요구할 권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내면화하는 조건이 되었다.

3.3 도시권리의 박탈과 저항의 정당성

하층민을 집단 분리시킨 문제와 함께 새 정착지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문제가 더해지면서, 단지도시의 계급차별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8.10사건이 발생했던 1971년 현재 정부가 광주대단지에 공급하기로 했던 공공서비스 시설(도로, 학교, 공원 등)은 당초 목표의 20% 정도 공급되었다. 생활편익시설이 절대 부족도 문제지만, 적절한 일자리의 부재는 단지도시 내의 생존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1970년 말 현재 준공된 6개 공장 중 가동공장은 4군데에 고용인원은 1천3백여 명에 불과했다. 홍보된 48개 공장 모두가 실제 가동된다고 해도 당시 광주대단지 인구 1할도 못 되는 13,857명만 수용할 수 있었다. 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이 열리지 않는 곳에는 어김없이 주민들이 호구지책으로 꾸리는 영세하

8) 1971년 9월30일 현재 광주대단지 입주자별 주민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원주민 3.4%, 철거민 29.8%, 일반전입자 49.3%, 세입자 17.3%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상진, 1992: 87).

9) 1971년 들어 6월 이전까지 대단지 내에서는 형사사범 4천8백67건 가운데 폭력이 1천786건, 절도가 927건, 사기가 543건으로 나타났다(김동춘, 2001).

면서도 탈법적 서비스업(예, 포차마차, 매춘 등)이 번창하지 않을 수 없다¹⁰⁾.

이렇듯 3년이란 건설기간을 정했지만, 그 기간 동안 인구는 획기적으로 늘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시설이나 고용기회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러니 도시가 제공해야 할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거주자의 권리는 무의미했다. 이는, 국가나 제도에 의한 추상적 도시권리(작품, 전유, 참여에 대한 권리)의 박탈과 달리 새 터전이 되어야 할 이주지에서 몸으로 체감하는 실질적인 권리인 도시 서비스 향유권(중심부에 대한 권리, 차이와 정보에 대한 권리)의 박탈을 의미한다. 어느 도시에서나 저소득층은 공공서비스의 더 많은 수혜를 필요로 한다. 이는 법에 의한 도시계획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렇지만 성남 대단지에는 도시계획의 이러한 일반 원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었다. 서울 대도시에서 강제 철거당한 후 새 정착지로 옮겨 왔지만, 저소득 입주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삶을 연명해야 했다. 서울 대도시에서도 적절한 주거 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한 채 쫓겨났고(중심부에 대한 권리의 박탈), 새 정착지에서도 도시계획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공공서비스(일할 기회 포함)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거주자로서 누려할 서비스 향유 권리(중심부에 대한 권리, 차이와 정보에 대한 권리, 거주자로서의 권리 등)를 이중적으로 박탈당한 것을 뜻한다. 권리의 이중적 박탈은 새 정착지의 삶이 그 만큼 더 거칠었음을 의미한다. 그 박탈에 대한 의식의 잠재화는 폭력적 저항이란 것을 필연화 했다.

이런 공간 상황에서 거주자의 다수를 차지한 (분양권) 매입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적인 불하가격과 취득세 부과는 이들의 주거권을 폭력적으로 빼앗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분양팍지의 불합리한 분배와 불법 전매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던 당시 상황에선 ‘매입입주’는 급조되는 신도시 공간 내에서, 그리고 국가의 사실상 방임 하에서, 주거를 형성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의 하나가 되었다. 더욱 매입 입주자들 대부분은 많은 부채를 안고 딱지를 매입했고, 또한 나름대로 주택소유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적 불하가격과 단시간 내의 매입 및 주택건설을 강제한 것은 그들의 재산권과 함께 주거권을 이중적으로 앗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매입거주자의 절박한 상황은 사실 잔류한 철거민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권리의 이중적 박탈감은 꿈을 쫓아 정착한 신도시에서 안정된 삶을 꾸려갈, 그래서 신도시 조성에 함께 하면서 삶을 전유할 권리의 총체적 박탈과 같이 느껴졌던 것이다. 이 두 주체가 8.10사건의 참여세력이 된 것은, 미세한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권리 박탈에 대한 의식의 내면화가 비슷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했듯이,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를 온전한 삶터로 지키고 향유할 권리(작품과 전유에 대한 권리)는 물론, 공동체의 터전으로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권리(참여의 권리), 도시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편익을 누릴 권리(중심부에 대한 권리, 차이와 정보에 대한 권리, 거주자로서 권리 등) 등을 망라한다(강현수, 2010b). 국가에 의한 단지도시의 조성 과정은 도시의 주체들에게 권리(전유권, 참여권 등)행사도 허용되지 않았기에 공동체 삶터로서 도시의 불완전한 구성은 그 결과이며, 이주지 삶의 절박성은 도시가 제공할 공공서비스 등을 향유하지 못한 삶의 곤궁함을 그대로 그 표현한 것이다.

건설기간 3년을 지나면서 성남대단지란 급조된 신도시는 룬펜프로레타리아적 공간 계급적 조

10) 1971년 광주대단지에는 공중전화 단 1대, 약국 57개 있었던 데 반해, 음식점과 술집이 731개, 카바레 8개나 있었다.

건과 권리박탈이 구조화된 사회 공간적 조건이 서로 맞물리는 상황을 깊숙이 내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상황에서 권리박탈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집단은 매입입주자들였다. 이들은 정부의 불하 조건에 대해 집단적 불만을 제기하고 이의 시정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자 이를 집단 시위를 최후 수단으로 선택했다. 8.10사건은 현상적으로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집단을 포괄적인 생존권으로서 도시권리의 박탈에 항거하는 8.10 사건의 유일한 주동자로 볼 수 없다. 시위 당일 전체 주민 14만 명 중 4만 명, 즉 매 집마다 한 두 명이 예고된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봐, ‘단지 시민’ 대부분은 권리박탈을 이미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그런 점에서 이들은 모두 잠재적인 시위 주동자였다 할 수 있다. 시위의 주동자로 간주되는 매입입주자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사건의 초기 조직자에 불과했고, 또한 불합리한 불하가격 문제를 쟁점화한 것은 대단지 공간 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던 보편적 권리박탈이란 ‘심층’의 지엽적 문제를 ‘표층’의 두드러진 현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했다. 시위가 전개되면서 불하가격의 문제는 들어가고 단지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빈민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약속대로의 도시조성, 구호식량 지급, 교통시설 확충 등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전면에서 드러난 것은 도시권 박탈의 결과가 표층을 넘어 심층의 모순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당일 시위가 폭력적 모습으로 옮겨갔다 해서 이를 단순히 우발적 군중행동으로 간주하기엔 단지 조성 3년 동안 단지 주민들이 권리박탈을 당하면서 저항의식을 알게 모르게 키워 온 측면을 쉽게 간과하게 된다. 매입입주자들은 사건 전에 집단민원을 이미 여러 차례 제기했고, 또한 삭발투쟁이나 향의집회도 여러 차례 개최했다. 또한 교회의 도움으로 민원을 집회로 조직하는 과정도 나름대로 거쳤다.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들이 지역별 회합이나 사발통문을 통해 단지시민들 사이에서 이미 숙지되고 학습이 되어 있었다. 당일 집회도 예고되었고 집회 참여자들도 시정을 요구하는 리본을 가슴에 단채 손에 피켓과 깡이를 함께 들고 나왔다. 단지 도시가 짧은 시간에 급조된 만큼, 권리박탈에 대한 피해의식도 그만큼 강했고, 또한 이를 저항으로 조직해 내는 과정도 영성하지만 상대적으로 집약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나름의 학습과 준비를 거쳐 개최된 8월10일 집회가 파괴와 폭력으로 옮겨갔던 것은 사건 당일까지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보인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반응의 폭발’이란 의미의 정당성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를 군중심리에 의한 우발적 행동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의미의 깊은 차원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다.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지만, 폭력이란 외피적 현상 때문에 도시권리의 박탈에 대한 단지시민들의 저항이 평가절하(예, 항쟁에서 항거로) 될 수 없다. 시위 참여자들은 분명 그들이 겪는 권리박탈에 대한 보상과 시정을 다양한 표어와 몸짓으로 표현했지만, 군중심리에 의한 폭력적 난동이란 타자적 해석에 의해 모두 묻혀버렸다. 사건의 핵심 주동자로 체포되어 옥살이를 했던 김철씨는 한 케이블방송과의 인터뷰(아름방송, 2009.8.9)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를 포함해 3만 명의 시위 군중은 그야말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태평동 옛 인하병원 자리인 성남 출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높았던 분양가를 인하해 달라, 사람답게 살도록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주민 공통의 요구를 외쳤습니다.”

3.4 8.10사건에서 8.10항쟁으로, 미완의 도시권리 회복

광주대단지 공간을 탈법적으로 급조해가는 가운데 거주자들이 박탈당한 도시권리는 합법적 도시계획을 통해 건설될 신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최소의 도시 생존권에 관한 것이다. 이는, 역사가 오래되고 구조가 정착된 도시에서 누려야 할 도시권리와는 분명 다른 것이다. 시위를 통해 제시된 요구사항은 그래서 기성도시에서 실현되고 보장될 것(예, 공공주택공급, 공원조성, 복지시설 확충)이 아니라 새 정착지에서 영위해야 할 최소한의 생존 조건(예, 일자리창출, 불하가격 인하, 도로개설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결코 개인의 생존권 문제로만 환원할 수 없는 것들이다. 광주대단지란 불완전한 사회공간 속에 사회적 약자인 거주자들이 상대적인 박탈을 겪었던 도시권리의 문제로 넓혀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시위에서 도시권리의 박탈문제가 정확히 노정되진 않았지만, 사건 후 정부가 수습해가는 과정에서는 불하가격 문제의 해결 보다 단지 자체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어가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정부가 8.10사건을 도시권리의 문제로 받아드리고 대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측면이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건 후 3일 만에 서울시장이 ‘3년 이내에 대 단지를 도시를 승격시키고’ 이를 위해 ‘장기도시계획’을 수립해 신도시로 완성시켜가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약속에 따라 단지는 3년 뒤에 성남이란 이름의 도시로 승격되었다. 또한 장기종합계획의 수립으로 비로소 광주대단지 이외의 대왕, 돌마, 낙생의 3개 면을 성남이라는 하나의 단위지역으로 설정하고 인구 5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로서 1971년부터 1990년까지 20년간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세워졌다. 이 계획은 1975년 목표 인구 25만의 도시계획으로 재정비되었는데, 이는 도시의 불량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인구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성남이란 도시는 8.10사건의 직접적인 소산물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8.10사건을 통한 도시권리 투쟁의 결과인 셈이다. 이로써 8.10사건은 도시권리 쟁취를 위한 항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기억과 흔적을 아무리 지우려 해도 이는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시위를 통해 요구된 것 이상으로 ‘제대로 된 도시 만들기’, ‘온전한 도시 조성’으로 정부가 반응을 보이고 조치를 취하게 됨에 따라 도시권리운동으로서 8.10 사건(이하 항쟁)은 형태나 조직을 달리해 계속될 필요성이 일단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운동형태로의 전환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8.10항쟁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시위 혹은 일시적 항거로만 축소 해석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시민사회의 요구나 감시 없이 정부가 ‘도시권리를 담보하고 실현하는 방식’으로 성남이란 도시를 제대로 만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아니다. 성남은 도시로 승격되고 난 뒤에도 서울 대도시의 문제의 해결을 돕는 ‘종속도시’로의 위상과 기능을 담당해 왔다. 수도권 주요 군사시설이 성남시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거 이전해 오고, 서울 강남형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성남시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부는 남단녹지를 일방적으로 풀어 대규모 병영주거지형 신도시를 찍어내듯이 만들었다. 판교신도시도 같은 방식으로 성남이란 도시공간 품에 억지 춘향격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외부세력에 의해 내부공간이 파편적으로 개발되고 상이한 계층적 배경을 가진 인구를 집단화시켜 온 결과, 성남의 도시공간 내에는 보이지 않는 계층간, 집단간, 지역간 긴장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 분화와 갈등이 있다하더라도 성남은 성남이다.

이렇듯 성남이란 계획적 신도시를 사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만으로 8.10항쟁을 통해 제기되었던 도시권리의 문제가 모두 해소되진 않았다. 오히려 8.10항쟁을 통해 제기된 ‘올바른 도시 만들기’에 대한 요구는 국가가 공세적으로 받아들여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국가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반영했다¹¹⁾. 그 결과 8.10항쟁을 통해 제기된 도시권리의 실현이 미완으로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하다. 8.10항쟁의 긍정성을 성남의 주체적 시민운동으로 이어내고, 또한 이를 통해 성남을 성남답게 만드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 것은 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남의 현재 상태는 8.10항쟁의 단절에 의해서만 초래된 성남만의 특수한 것이 아니다. 수도권 주변의 도시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문제 상황이다. 수도권 신도시들이 현재 공통으로 겪는 문제는 개별 도시의 권리 범주를 넘어 한국사회 전체 수준 혹은 한국자본주의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힘의 논리가 더 우월하게 작용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때문에 위성도시로서 성남의 도시문제를 가지고 8.10항쟁의 단절성을 평가절하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반대로, 8.10항쟁의 주체적·적극적 평가를 통해 그 긍정성을 옹골케 되살려 현재의 사회 운동적 에너지로 활용한다면, 위성도시 성남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 있다.

4. 8.10사건(항쟁)의 유산: 도시 정체성과 사람중심 도시다움의 확립

현재의 성남이란 도시는 8.10사건(이하 항쟁)을 통해 탄생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구 성남(구시가지)은 8.10항쟁을 일으키게 한 성남 대단지의 공간적 형태와 구조를 많은 부분에서 그대로 이어받은 채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신성남이라 일컫는 분당도 8.10항쟁 이후 성남 도시성장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유보공간으로 남겨두었던 남단녹지를 풀어 당시 시급한 수도권(서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신도시로 개발된 것이다.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양 지역은 8.10항쟁 후 태어난 성남이란 자치공간 내에서 운명을 함께 하고 있다(예, 현 시청사 자리는 이를 위한 것으로 선정되었음). 판교 신도시까지 가세하면서 성남은 이른바 ‘3색 도시’가 되었다. 이는 8.10항쟁 이후 탄생한 성남이 수도권 위성도시로 성장해 가면서 각 시대별 발전의 상이한 모습을 담고 있는 셈이다. 8.10항쟁을 계기로 태어난 성남이란 도시공간이란 틀이 있지 않았다면 이 3색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각 지역의 주민들은 성남이란 도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역사성을 갖고 있고, 또한 사회계층적 성향과 공간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삼색 성남의 각 지역들은 타 지역과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쉽게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8.10항쟁을 성남이란 도시태생의 공통 모반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역별 온도차가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8.10항쟁을 성남의 기원으로 받아드리는 것조차 기피하는 지역적 기류도 없지 않다. 어떤 경우이든 이는 자기 부정이고 자기 폄훼에 불과하고, 또한 사실(史實)의 부정에 불과하다. 성남이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 이러한 자기부정과 왜곡은 걸림돌이 될 뿐이다. 따라서 3색 도시 성남이 통합적 도시로, 또한 역사성이 있는 개성적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8.10항쟁을 태생적 뿌리와 기원으로 공유하고, 이를 모든 도시발전의 정초로

11) 당시 정부의 기본입장은 빈민 주거권 보장과는 멀었기에 빈민의 관점에서보다 사회기강의 관점에서 정부가 8.10사건에 신속하게 사과하고, 또한 약간의 정책변화를 시도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동춘, 2001).

삼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8.10항쟁은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인지되어 온 것과는 달리 현재와 미래의 성남에 이어내고 실현해 낼 긍정성을 적지 않게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는 곧 8.10항쟁의 유산이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8.10항쟁을 도시권리운동으로 규정했다. 8.10항쟁의 성격을 그렇게 재규정해 갈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8.10항쟁을 성남 도시정체성의 보다 확고한 뿌리로 둘 수 있고, 또한 그 긍정성을 살려 미래의 성남을 보다 사람답게 사는 주체의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점이다.

이 글은 8.10항쟁을 국가권력의 모순에 의해 조성된 신도시란 삶터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생존권 박탈을 도시권리의 박탈로 인지하여 이를 자의식적으로 저항하면서 국가와 다툼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항쟁으로 규정했다. 도시권리는 도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인권과 같은 것이다. 도시권리가 현행법에서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정도는 나라에 따르지만, 최근 들어 유엔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법, 헌장, 조례 등의 방식으로 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강현수, 2010b, 2011). 혹자는 우리나라에서 도시권리를 구체권리로 제도화하기에 이르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특히 성남대단지가 조성되던 시점으로 거슬러 가면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초기 산업화나 도시화 단계에서 도시권리란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로 말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반추해 보면, 비록 초기이긴 했지만 불완전한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거주자들이 겪는 공통의 생존권 박탈문제는 명확한 도시권리의 박탈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와 차이가 있다면, 그 인지적 수준이 초보적이고 맹아적인 것이라 점 정도다. 당시에 도시권리가 제도적으로 부재하거나 보장될 수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도시계획법의 올바른 집행만으로도 이주자들의 도시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실현시켜 줄 수 있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까닭은 법 집행자인 국가기관의 반민주성, 즉, 피계획 주체의 권리부정(불인정) 때문이다.

8.10항쟁은 정부 수립이후 최초의 최대 규모 군중시위이면서 최대 규모의 도시운동이었지만, 그 동안 난동이란 규정이 갖는 이미지의 부정성으로 인해 올바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왔다. 도시운동으로 8.10항쟁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들어가면, 그 최대치는 바로 도시권리 쟁취운동이다. 도시권리운동으로 (재)평가할 때, 우리는 성남대단지가 비록 군사독재정권이 빈민약자를 집단수용하여 배제시키는 탈법적 방식으로 조성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단지 거주자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제약받는 공간적 삶의 틀을 자의식적으로 저항하고 바꾸려했던 건 사실이다. 이는, 8.10항쟁이 도시의 거주자들이 우연히 거주하게 된 주민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 주체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또한 그렇게 설정하려는 시도였음을 의미한다. 8.10항쟁을 도시권리운동으로 해석하고, 또한 성남도시의 태생기반으로 삼는다면, 성남은 우리나라에서 도시주체들이 도시권리를 주장하고 그 실현을 추구하는 최초의 도시가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성남은 ‘권리의 도시’, ‘주체의 도시’ 라는 남다른 도시적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정체성은 수도권 위성도시이자 서울의 종속도시이며, 내부적으로 분열된 도시를 ‘주체의 도시’, ‘권리가 구현되는 도시’, ‘통합적 도시’ 로 만들어가는 성남만의 독특한 도시적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8.10항쟁은 부끄러워할 역사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성남의 뿌리이자 정체성의 속살로 담아내야 할 성남만의 유산인 것이다. 권리의 도시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대접받는 도시’ 를 지향한다. 미래의 성남이 갖추어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싶다.

도시권리는 도시를 통해 구축된 문명적 삶의 방식이 구축되는 장으로 조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작품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를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가 우선시 되는 공간으로 구축하는 ‘전유의 권리’, 도시를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통치해가는 과정에 대한 ‘참여의 권리’, 도시의 중심적 가치와 관계에 결속될 수 있는 ‘중심부에 대한 권리’, 도시의 물적 비물적 서비스를 도시거주자와 이용자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는 ‘차이와 정보에 대한 권리’, 도시거주자로서 거주적 삶 자체를 보장받은 ‘거주자의 권리’, 이 모두는 8.10 항쟁을 통해 박탈된 모습으로, 또한 이의 보장을 총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거칠게나마 표출되었다. 성남이란 도시의 탄생은 이런 도시권리 주장을 수용한 결과지만 권리의 도시로서 성남은 아직까진 미완으로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8.10항쟁의 유산은 도시권리운동으로서 8.10 항쟁을 도시의 기원으로 삼고, 지금의 3색 위성 도시 성남을 도시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되는 사람(권리권자)중심의 통합적, 민주적 자치도시로 재탄생시켜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도시권리헌장(혹은 조례)의 제정해, 이를 도시자치의 이정표로 삼아, 도시권리가 보장·실현되는 ‘작품으로서 도시’ (도시권리 중 최상위 권리가 구현된 도시)로의 도시로 만들어가야 할 성남시민의 의무가 8.10항쟁이 남긴 유산이다.

참 고 문 헌

- 강현수, 2010a, ‘<왜냐면>: 도시공간 누릴 시민권리 빼앗는 대한민국’ <<한겨레>> (2010.3.31)
- 강현수, 2010b,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서울: 책세상.
- 강현수, 2011, ‘주민의 권리를 통한 참여도시만들기’, 조명래 외 공저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 서울: 한울.
- 김동춘, 2001, ‘71년 광주대단지 8.10항거의 재조명’, 8.10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주최 <<8.10사(광주대단지사건)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논문.
- 김동춘, 2011, ‘1971년 8.10 광주대단지 주민항거의 배경과 성격’, <<공간과 사회>>, 제21권 4호 (통권 38호), pp.5-33.
- 김원, 임미리 외, 2020, <<성남시 광주대단지 사건 학술연구: 결과 보고서>>, 성남시.
- 김준기, 2001, ‘8.10 민중항쟁과 성남의 정체’, 8.10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주최 <<8.10사(광주대단지사건)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논문.
- 조명래, 로브 윌즈, 2000, ‘앙리 르페브르: 일상생활의 철학’, <<공간과 사회>>, 제14권, pp.10-35.
- 손정목, 2004, ‘8.10사건의 경위: 서울시의 입장에서’, 성남문화원 주최 <<‘제9회 광주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에 관한 학술회의’>> 발표논문.
- 신승원, 2016, <<앙리 르페브르>>,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박태순, 2004, ‘밑에서부터 본 8.10사건’, 성남문화원 주최 <<‘제9회 광주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에 관한 학술회의’>> 발표논문.
- 조명래, 2002, <<현대사회의 도시론>>, 서울: 한울.
- 조명래, 2011, ‘8.10 성남 대단지 사건의 재해석과 성남 도시정체성의 모색’, <<공간과 사회>>, pp.34-66.
- 하동근, 2004, ‘8.10사건에 대한 입장들’, 성남문화원 주최 <<‘제9회 광주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에 관한 학술회의’>> 발표논문.
- 한상진, 1992, ‘서울 대도시권 신도시개발의 성격: 광주대단지와 분당 신도시의 비교 연구’, <<한국의 지역문제와 노동계급>>, 서울: 민음사.
- Butler, Chris, 2012, *Henri Lefebvre: Spatial Politics, Everyday Life and the Right to the City*, London: Routledge.
- Kofman, Eleonore and Elizabeth Lebas, trans. and ed., 2000, *Writings on Cities: Henri Lefebvre*, Oxford: Blackwell.

...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광주대단지와 도시의 미래

1

주제발표

광주대단지 사건의 성격과 현재적 의의

임미리 박사



광주대단지 사건의 전개, 성격, 의의

2021.07.06.

임 미 리

“서울은 만원이다”

이호철, 1966년 동아일보 연재소설

무허가촌 = 사회악

반사회성, 범죄성, 비위생성



무허가주택 양성화 / 시민아파트 건립 / **집단이주정착지 조성**

서울시내 유희 국공휴지 소진

위성/인공도시 건설

광주대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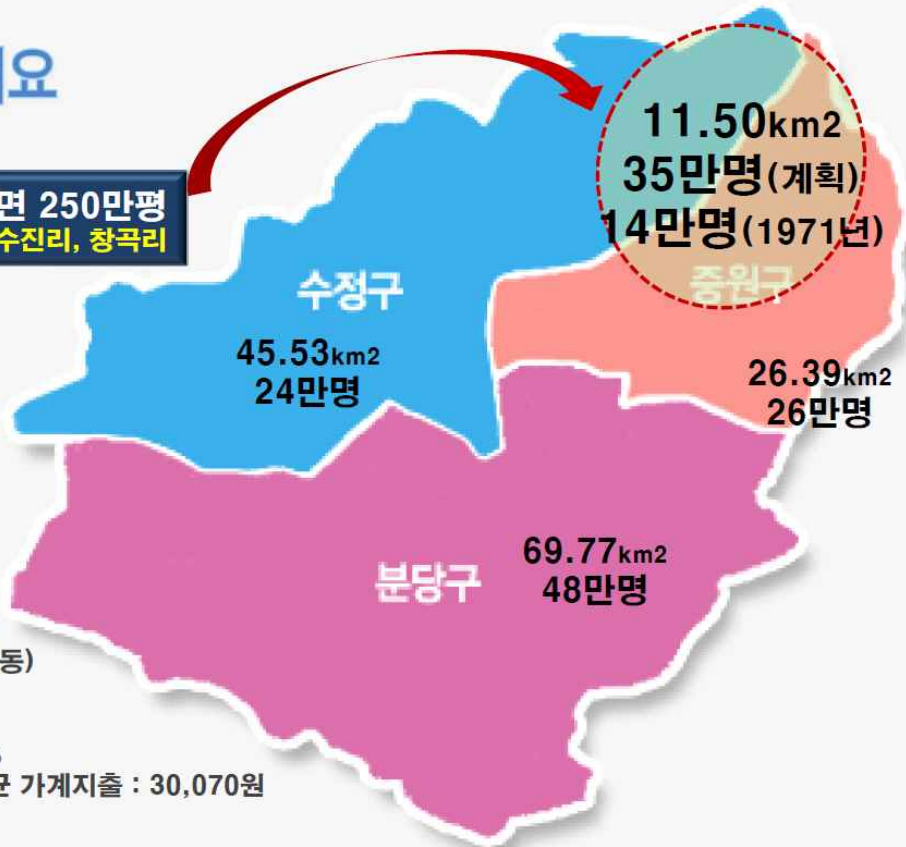
“10만 명 모아놓으면
알아서 뜯어먹고 산다”

- 김현옥 서울시장 -

광주대단지 개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250만평
단대리, 탄리, 상대원리, 수진리, 창곡리

- 분양평수
철거민 : 20평
세입자 : 8평
- 큰 길
모란-북정-천호
- 판자집, 천막
입주자 38%(9,120동)
가수용시설 전체(3,140동)
- 생활수준/교육수준
월평균 1만원 이하 23%
- 1971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 30,070원
중졸 이하 67.7%



성남시 : 141.70km² 98만명

증언을 통해 본 광주대단지 실상

“청계천 주변의 인쇄공이었던 한 가정이 아내가 여기에 지쳐 실성해 갓 난아기를 삶아먹었다고 하며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하는 이장의 생생한 증언에 치를 떨었다. 직접 보고 들은 현장을 오히려 걸러서 광주대단지 르포를 꾸렸다.” (고려대 한맥 회원 조상호)

신동호, 2005, 「긴급조치9호세대 대탐험」, 『뉴스메이커』 556호 3월호

“70년 봄에는 전염병이 번져 한 천막촌에서 3, 4구의 시신이 나갈 때도 있었다.” (홍사홍)

박기정, 1971, 「르보 광주대단지」, 『신동아』, 10월호

“바람이 세차게 불 때마다 집이 마구 흔들렸다. ... 그녀는 나에게로 달려오며 ‘집, 날아 갔어요!’ 하며 목이 메었다.”

김상운, 1986, 「광주대단지 철거민들의 애환」, 『신동아』, 3월호

공간적/사회적 격리에 따른 빈곤과 공포

구분	현황
면적	• 350만 평(12km ²)
주택 면적	• 조성 계획 : 111만 평 • 조성 면적 : 72만 평(분양 면적 45만 평)
인구 현황	• 총계 : 139,867명(30,771세대) • 원주민 : 4,653명(1,025세대, 3.3%) • 이주민 : 135,214명(29,746세대, 96.7%)
취업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활동 가능 인구 : 42,173명(전체 인구의 30.4%) • 정상 취업 : 16,750명(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39.7%) • 비정상 취업 : 15,660명(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37.3%) • 실업자 : 9,773명(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23.0%) ※취업 알선 대상 : 25,433명(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60.3%)
가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가옥 : 23,988동 • 정상 가옥 : 14,868동(전체 가옥의 62.0%) • 비정상 가옥 : 9,120동(전체 가옥의 38.0%) ※가수용분 : 3,148동(판잣집 2,299동, 천막 849동)
학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 5개교(3개 신설 중) • 중학교 : 2개교(1개 신설 예정) • 고등학교 : 없음(2개 신설 예정)

분양권 전매 금지와 일시불 상환 조치

- 철거민 이외의 입주 희망자들의 전매 행위 발생
- 투기꾼들의 가세 => 분양증 가격 계속 상승
- 서울시, 1970년 7월 11일 전매 금지 및 일시불 매수 계약 통고
- 분양증 매매가격 급락 => 부동산 거래 중단 => 경기 침체
- 서울시의 조치 시행 보류와 두 번의 선거 => 투기 재극성
- 서울시의 재정난 봉착과 1971년 7월 13일 2차 전매 행위 금지 조치 발표

1971년 8월 10일

박정희정권 최초, 최대 도시봉기

전개과정

날짜	사건	내용
1970. 7. 13	1차 전매 행위 금지 조치	전매입자 시가 일시불 분양 계약 체결 공고
1971. 4. 27 1971. 5. 25	제7대 대통령 선거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차지철 후보 "토지 무상 양여, 5년간 면세" 약속(공약 남발)
1971. 7. 13	2차 전매 행위 금지 조치	전입자 분양 재계약 및 일시불 납부, 철거민 택지 대금 일시불 납부 공고
1971. 7. 17	불하가격 시정대책위원회 구성	100여 명이 제일교회에 모여 11명 대책위원회 구성, 고문에 제일교회 전성천 목사, 위원장에 박진하 장로
1971. 7. 19	유지 대회	2000명 결집, 각 구마다 2인의 대표 추가해 33인으로 대책위원회 구성
1971. 7. 24	서울시·경기도출장소에 결의문 제출	1만 5000가구 날인을 거친 결의문 제출
1971. 7. 28	대책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개칭	33인 위원에 184개 단지 당 1명씩의 대표를 추가해 217명으로 대책위원회 구성, 89개 단지별 1인씩 추가해 총 117명이라고도 함, 전단·포스터 작성해 집집마다 배포
1971. 8. 1	건물 취득세 고지서 발부	경기도 성남출장소 명의로 건물 10평당 평균 3000원 부과
1971. 8. 3	주인 쫓겨대회 개최 합의	개관대회 열고 8월 10일에 주인 쫓겨대회(쫓겨) 열기로 합의, 광주대단지 출장소장은 서울시 본청에 구원 요청
1971. 8. 9	투쟁위원회, 서울시 부시장과 협상	서울시 부시장과 투쟁위원회 대표자들 협상했으나 결렬,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장이 와서 협상키로 합의
1971. 8. 10	8·10 소요 사태 발생	3~6만 명 참가
1971. 8. 12	서울시장 방문 및 사과	전성천 포함 주민 대표 4인 서울시장 방문해 난동 사태 사과
1971. 8. 12~13	주모자 구속	12일 12명, 13일 8명 구속, 2명 수배
1972. 1. 24	구속자 선고 공판	2명 실형, 19명 집행유예, 1명 무죄

사건 당일 결정사항

- ① 전매입주자 대지가격도 원철거민 이주자와 동일 취급한다.
- ② 주민 복지를 위하여 구호양곡을 방출하고 자조 근로 공사를 아울러 실시한다.
- ③ 경기도 당국과 협의하여 취득세 부과는 보류하도록 하겠으며 면세를 추진하겠다.
- ④ 주민들은 당국과 협조하여 계속 지역 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

대책위원회의 이중성

- 전성천을 포함한 주민 대표 4명은 사건 직후인 8월 12일 양택식 서울시장을 방문해 난동 사태를 사과

“데모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고 감사한 생각을 아울러 느끼게 된다. 특히 당시 광주경찰서장이었던 김주동씨가 관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광주군수였던 황두영씨가 좌천을 당한 것 외에 많은 공무원이 문책을 받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데모대가 던지는 돌이 맞아 몸에 부상을 입고도 발포를 하지 않고 부동의 자세로 그 의무를 다한 경찰관들의 인내와 용기를 지금도 고맙게 기억하고 있다.

- 대책위 고문 전성천 자서전 -

사건 보도



광주단지 주민들의 가난한 나날

광주단지 주민들의 가난한 나날... (Small text columns describing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residents.)

광주단지 대규모 亂動

地下埋藏된우주 서울市違約에 격분 放火

가난

工場誘인 가난 全住民이失業상태 종관이 어려워 16萬生計막연

無法 부른 不毛의 황야

광주團地住民들의 가난한 나날

廣州團地를 市로 昇格

關係各部 亂動사건 긴급대책협의



救護양곡 2千톤 방출

땅값 크게 내리고 地方稅도 輕減

主謀 15명

폭력

승리

사건 후 '빛과 어둠'

1973년 성남시 승격



4. 治安 및 消防對策

가. 城南警察署新設

- ① 5個課, 187名 吏員
- ② 10個派出所設置 情報及 特殊 搜查要員補強
- ③ 集團的 行動에 對策을 準備하여 事前動向을 把握하고 強壓部隊 編成
 - 自衛 鎮壓隊 103名 365個 裝備 神有
 - 隣接 5個 地域 190名 } 支援 體制 確立
 - 서울 경찰 機動隊 492名

5. 모란 團地에 對한 對策

모란 團地는 그 地域에 對한 綜合開發計劃 施行에 支障이 있으므로 現在의 入住者에 對하여는 廉價大團地로 吸收 入住 시키기로 함

6. 民心의 動向과 對策

가. 問題點

- ① 現地 住民은 서울 市로 移住 追放 當選 後 被辱 意識이 있고 住居 特別 租稅의 導入 運動을 展開하고 있음
- ② 低所得層의 集團化로 生活에 對한 不滿이 組織化한 憂慮가 있음
- ③ 地價가 下落하고 景氣가 衰退 될 것이라는 데 對하는 期待에 어긋나다는 不滿

0666 642 285
 대통령 보고서 대령비서실 48892 48942

1971.10.14, 보고번호 제71-45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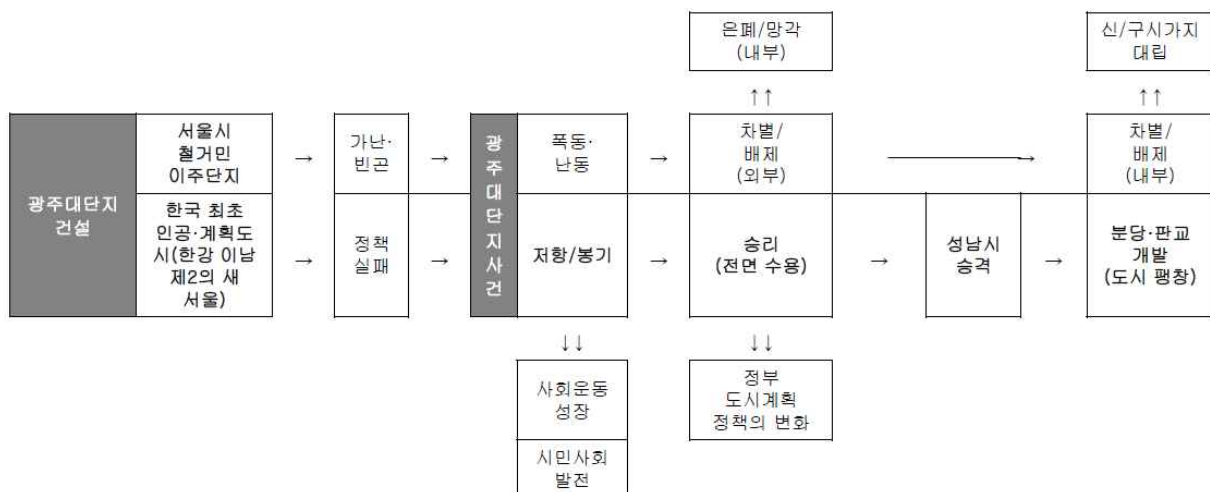
주민 감시와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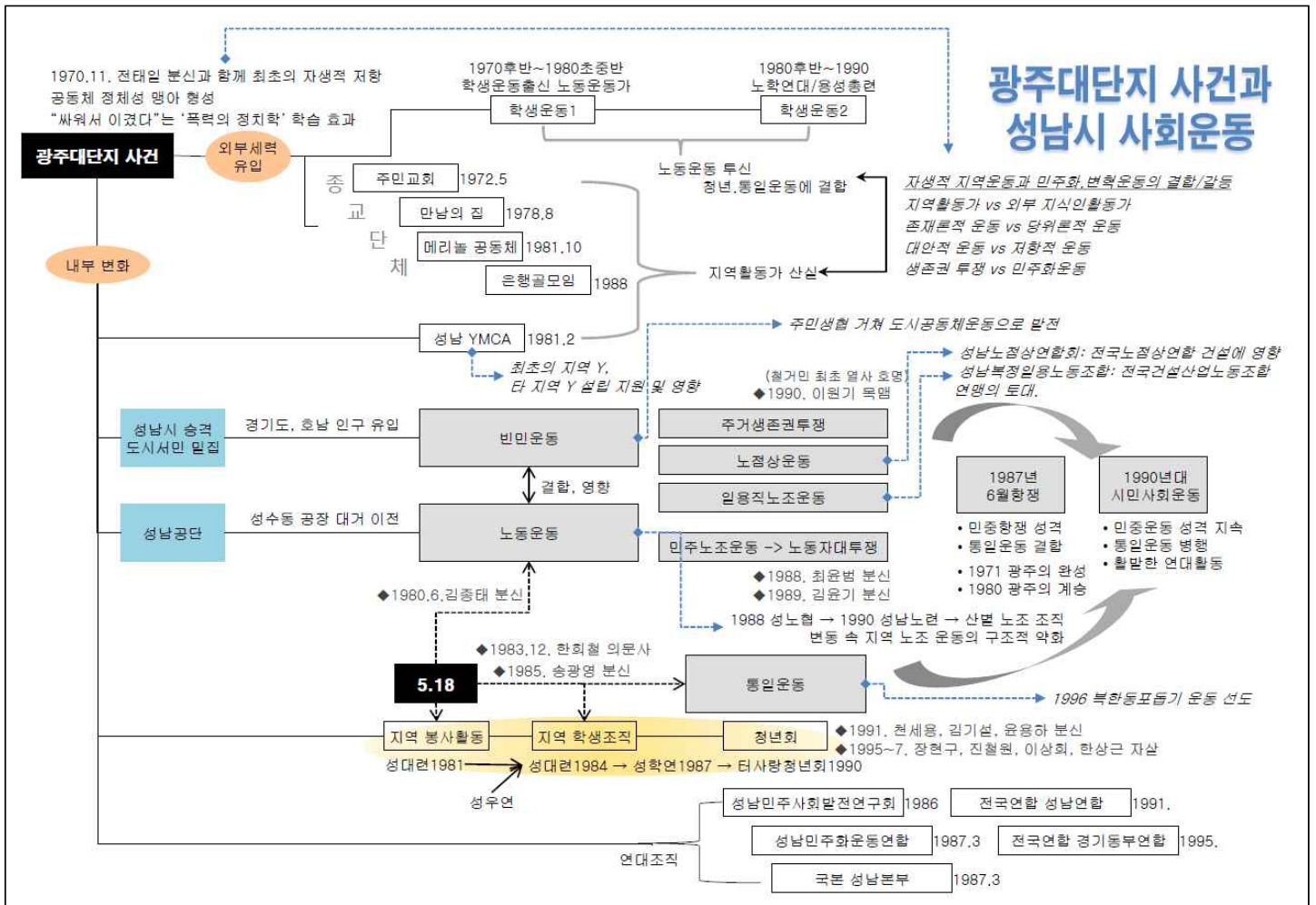
- ◆ 1971. 집단적 행동에 대비하여 사전동향을 파악하고 진압부대 편성
- ◆ 1980. 5.18 당시 군병력의 성남시 포위

차별·배제의 심화

“산모가 아이를 삼아먹었다”
 “폭동, 난동의 도시”
 “범죄 소굴, 무법천지”

광주대단지 사건을 중심으로 한 성남시 역사





...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광주대단지와 도시의 미래

2

주제발표

광주대단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의 의의와 어려움

-성남시 정체성의 측면에서-

김민환 교수(한신대학교)



광주대단지사건(성남)과 도시의 미래

광주대단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의 의의와 어려움:

성남시 정체성의 측면에서

김민환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1.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 선택과 기각(배제), 강조와 생략
- 이야기(내러티브)
-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message)
- 메시지 전달의 '형식'

=> '무엇을', '어떻게' 기념하는가?

※ '광주대단지 사건'의 경우, 성남 혹은 '광주대단지'라는 '공간'적 요소가 결부됨.

2. '광주대단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강조될 수 있는 것들: 이념형(ideal type)적 분류

(1) '적' 혹은 극복할 대상

- 도시 빈민을 “눈에 안 띄도록 치우는” 데에만 관심 있었던 국가(혹은 서울시)
- 구획정리도 되지 않은 땅에 전기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조차 갖추지 않고서 많은 사람을 몰아넣는 '격리'적 방식의 정착 정책
- 국유재산을 개발하는 방식 등
- '진압' 혹은 사건처리 방식의 부적절함(?)

2. '광주대단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강조될 수 있는 것들: 이념형(ideal type)적 분류

(1) '적' 혹은 극복할 대상

- ※ '적' 혹은 극복할 대상이 명확하고 강력할 경우, 이에 대한 강조 역시 강력함.
'가해자 처벌'이라는 구호 혹은 당위와 결합할 수 있음.
그런데, '광주대단지' 사건에서는 이것들이 그렇게 강력한가?
- ※ 가난한 자들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국가에 부화뇌동한 '우리' -> '연루(implication)'의 문제.

2. '광주대단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강조될 수 있는 것들: 이념형(ideal type)적 분류

(2) 사람 혹은 세력, 주체

- 다른 사람들이 침묵할 때 침묵하지 않았는가?
- 침묵하지 않음으로써, 혹은 그(녀)(들)의 피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불러내었는가?
-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었는가?
- 그(녀)(들)은 그 새로운 가치의 (개인적/집합적) 상징이 되었는가? 혹은 그(녀)(들)을 상징으로 만들 수 있는가?

2. '광주대단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강조될 수 있는 것들: 이념형(ideal type)적 분류

(2) 사람 혹은 세력, 주체

- ※ 그 시절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가 다를 수 있음.
당사자와 관찰자의 의견도 다를 수 있음.
이 경우, 선택이 필요함.
- ※ '광주대단지 사건'의 경우, 참여자 혹은 주도자, 희생자, 동참 혹은 연대한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 뒤의 '영향력' 부분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음.

2. '광주대단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강조될 수 있는 것들: 이념형(ideal type)적 분류

(3) 참여자들이 주장한 요구사항 혹은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던 (좌절된) '꿈'

※ '광주대단지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표면적이고 이해관계에 기반한 요구사항은 대체로 받아들여지게 됨. 특히, 대책위 요구사항 등은 상당 부분 수용됨. 다만, 대책위의 성격 자체가 '전매입주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 '사건'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주장된 바 없음. 언어화되지 못한 이들의 좌절된 '꿈'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념될 만한 것인가?

2. '광주대단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강조될 수 있는 것들: 이념형(ideal type)적 분류

(3) 참여자들이 주장한 요구사항 혹은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던 (좌절된) '꿈'

※ 좌절된 꿈의 '부활' 혹은 '복원'은, 그 꿈을 다시 꾸게 되는 시점의 필요 혹은 다시 꾸는 사람들의 꿈이 겹쳐져 있음. 사실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할지 모르는데, 왜 그들의 꿈을 지금-여기에서 다시 꾸고 있는가?

2. '광주대단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강조될 수 있는 것들: 이념형(ideal type)적 분류

(4) 사건 자체의 독특함

- 격렬함: 한국 사회 전체가 기념하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 '광주대단지 사건'은 덜 격렬함.
- 지속성: 8월 10일 하루 동안 전개된 사건으로, 여러 날 중 대표적인 날짜로 기억되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 사건의 지속성이 약함.

(cf. 제주4·3사건 - 1947년 3월 1일에서 1954년 9월 21일까지, 광주민주화운동 - 1980년 5월 18일에서 5월 27일까지).

- 영향력: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2. '광주대단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강조될 수 있는 것들: 이념형(ideal type)적 분류

(5) 영향력

- 신도시 조성 방식을 변화시켰는가?

※ 성남시 정체성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해 보면, "50년 전 '광주대단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후 '성남시'가 탄생했고, 그로부터 20여 년 후에 '분당신도시'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조성될 수 있었는가?"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이 진술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대단지 사건'의 '기념'을 위해 이 진술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혹은 이 진술을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전개하는가? 물론, 분당신도시 조성방식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해야 하겠지만.

2. '광주대단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강조될 수 있는 것들: 이념형(ideal type)적 분류

(5) 영향력

- '꿈'을 확산시켰는가?

※ '광주대단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의 철거민 혹은 서울의 도시빈민들이 '도시빈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들의 꿈은 그들만의 꿈인가?

2. '광주대단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강조될 수 있는 것들: 이념형(ideal type)적 분류

(5) 영향력

- 성남시의 정체성에 어떤 긍정/부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 다시 한 번 '연루'의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참여자들의 꿈을 좌절시킨 것은 결국 '우리의 꿈'이 아니었는가?

성남에 들어온 사회운동가 및 성남에서 성장한 사회운동가들의 활동도 여기에서 이야기될 수 있을 듯.

3. ‘광주대단지 사건’이라는 이름: 기념사업의 목적과 관련해서

- 현재 관점에서 의미를 확정하지 않고, 강조점들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또 ‘역사성’을 가진 이름이기 때문에 당분간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듯.
- 기념사업의 목적이 ‘계몽’이 아니라 ‘기억공동체’의 확대라면, 확정되지 않은 이름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와 연관된 논쟁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

3. ‘광주대단지 사건’이라는 이름: 기념사업의 목적과 관련해서

- 비어있는 것의 강력함.

※ 제주의 사례

“확실히 백비의 ‘여백’은 제주 4.3의 역사적 의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타협물일지도 모른다. 누워있는 백비가 어떤 이에게는 좌절과 안타까움, 통한의 감정을 자아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혹은 우리는 기억한다. 4.3기념관 입구의 그 어두운 동굴을 지나, 처음으로 백비를 만났을 때의 전율을.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이것이야말로 4.3운동을 이끌어 온 모든 것이 아닌가!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과는 별개로, 백비에는 4.3 전체를 하나의 운동으로 만들어 내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54년에 끝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70년 동안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국가폭력과 그에 대한 저항의 운동. 그러므로 백비는 그 자체로 4.3운동의 현실과 한계를 초과해 버린 어떤 것,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과 항쟁에 대한 ‘우리’들의 ‘선언’이며, 피해자를 기억하는 우리자신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3. '광주대단지 사건'이라는 이름: 기념사업의 목적과 관련해서

- '광주대단지 사건'을 기억하는 '우리 자신'을 기억하는 것.
- 모든 기념은 결국 '우리 자신'을 기억하는 것으로 귀결됨.
- "우리는 고통에 대한 공감할 수 있으며, 폭력적 역사와 연루되어 있다는 책임감" 을 기억하는 것.
- 이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 아닐까?

...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광주대단지와 도시의 미래

3

주제발표

시민의 탄생과 정책의 발전

- 성남 광주대단지와 도시의 미래 -

박세훈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성남시·국토연구원 공동주최
8·10 성남 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 기념 세미나(2021.7.6)

시민의 탄생과 정책의 발전

성남 광주대단지와 도시의 미래

박세훈 shpark@krihs.re.kr

국토연구원  KRIHS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는 어디에서 왔는지
돌아 보라.

- 아프리카 속담

01

성남 도시발전의 역사

도시통합과 정체성

02

03

성남 도시전통의 재해석 : 시민과 정책



01

성남 도시발전의 역사

도시통합과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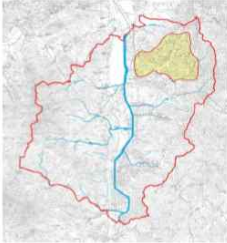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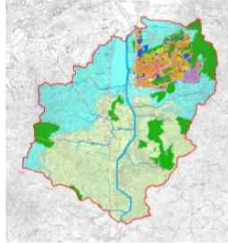
성남 도시전통의 재해석 : 시민과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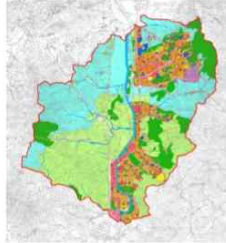
성남시 도시발전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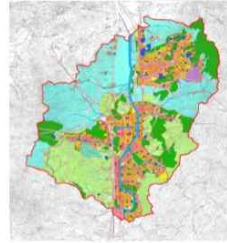
- 1968.5.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고시(광주대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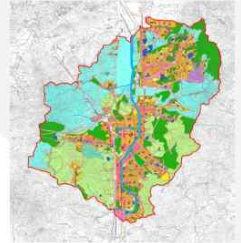
- 1971.7 개발제한구역 지정
- 1973.7 성남시 승격
- 1976.5 남단녹지 건축제한 공고



- 1989.5 분당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1996.12 준공)



- 2001.12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8.8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15.11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5

서울 대도시권의 성장과 성남

서울 대도시권 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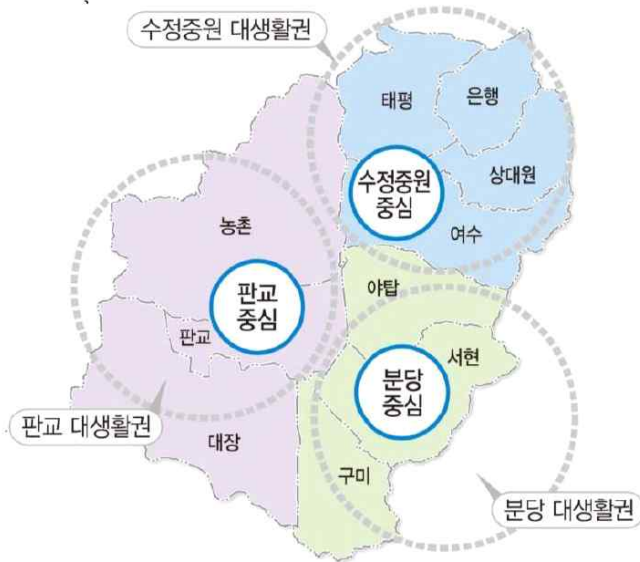
- 경부고속도로 건설 및 강남개발 (1967)
- 서울시 철거민 교외 집단 이주 (1968)
- 개발제한구역 지정 (1971)
- 남단녹지 지정 (1976)
-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1982)
- 제1기 수도권 신도시 조성(1989)
- 제2기 수도권 신도시 조성(2001~)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2008)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

성남시 영향

- 광주대단지 조성
- 성남시 북측 일원 지정
- 성남시 남측 일원 지정
- 성남시 과밀억제권역 설정
- 분당신도시 조성
- 판교신도시 조성
- 위례신도시 조성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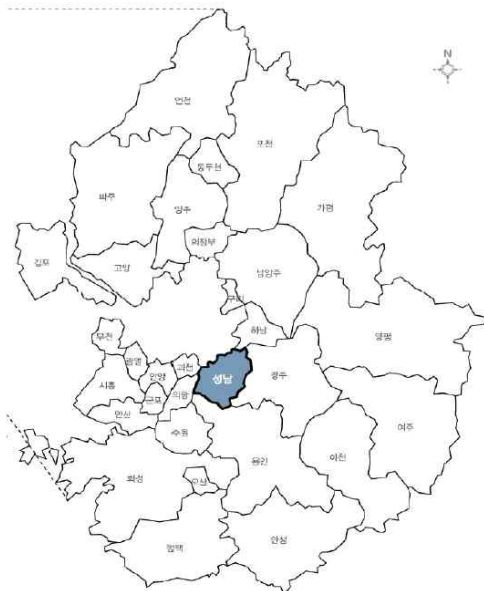
성남, 공간 분절의 역사



- 건설 시기가 다른 세 개의 도시로 구성
→ 분절된 공간구조, 상이한 주민구성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의(2016) 공간구조구상

성남, 수도권 정책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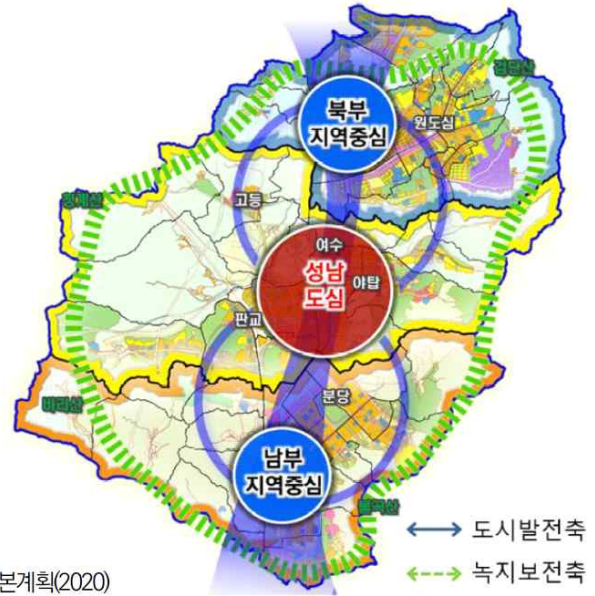
- 수도권 정책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성남시를 좌우하는 정책이 결정됨
→ 도시발전을 주도적으로 설계하지 못함

• 성남의 역사는 수도권의 역사

- 광주대단지 조성
- 개발제한구역 설정
- 남단녹지지정
- 과밀억제권역 설정
- 1,2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

공간통합의 과제

- 새로운 공간구조와 생활권 설정(2020)
 - ✓ 성남의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공간구조 제시
- 중심지 역할 강화, 행정구역과 불일치, 지역간 연계 등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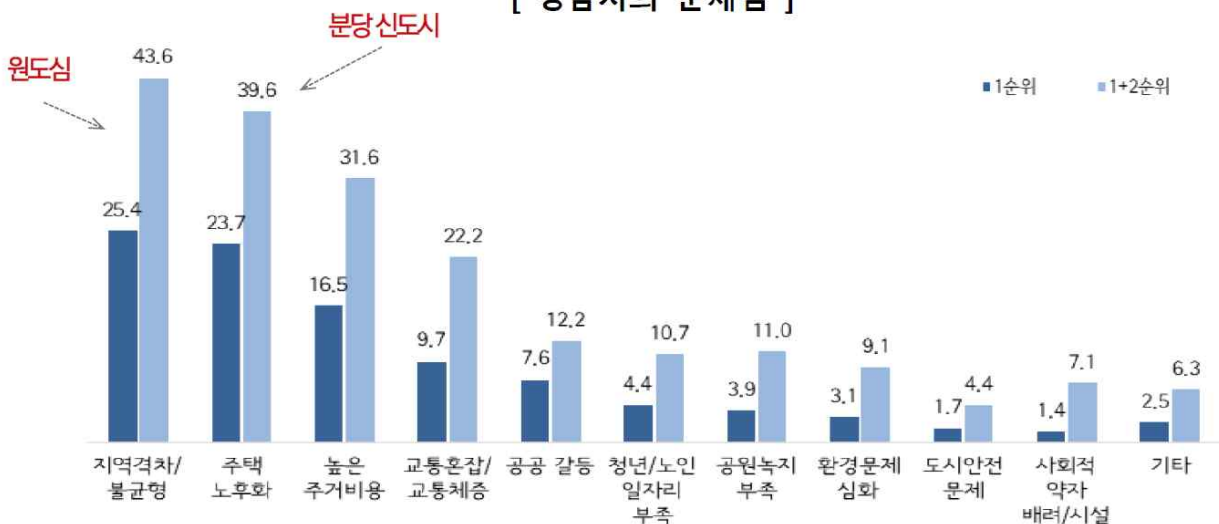
자료 :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2020)

11

주민통합의 과제

- 성남의 문제는 지역격차

[성남시의 문제점]



자료 :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2020)

12

주민통합의 과제

- 생활권별로 상이한 요구와 과제

지역	핵심과제	배경
원도심	• 원도심 활력 회복	• 노후불량 고밀 구릉지 도시주거환경개선 • 지역산업, 일자리 부족 • 생활인프라 양적, 질적 부족(공원녹지, 주차장 등)
분당	• 노후 인프라 개선	• 노후신도시 물리적 쇠퇴 • 리모델링/재건축 갈등 • 여가시설 확충 및 재선 • 지역경제 활성화
판교	• 판교 산업생태계 완성, 확산	• 야간, 주말 공동화 • 산업지원기능 부족(저렴한 주거, 생활지원시설 등) • 교통환경 불편(대중교통 및 주차장 부족)

자료 :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재구성

13

공유된 비전과 정체성

- 신도시로 형성된 도시로 고유의 정체성 부족
- 분절된 공간과 주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공유된 비전 불명확
- 과거의 공유, 비전의 공유 필요

도시 미래상

소통과 화합의 글로벌시티, 성남!

세계적 도시로의 도약

핵심 이슈 1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ICT 도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성

핵심 이슈 2
화합 · 상생이 이루어지는 소통네트워크 도시

상위질 제고

핵심 이슈 3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행복문화 도시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의 비전

14

01 성남 도시발전의 역사

02 도시통합과 정체성

03 성남 도시전통의 재해석 : 시민과 정책

15

광주대단지과 시민의 탄생

- ‘시민’의 탄생
 - ✓ 광주대단지는 국내 최초의 **도시권리운동**
 - ✓ 권리와 책임을 가진 시민의 탄생
- 광주대단지 이후 도시운동의 성장
 - ✓ 도시빈민운동, 철거민 운동(1980-90년대)
 - ✓ 마을만들기 운동, 젠트리피케이션 반대 운동(2000년대 이후) → 도시재생
- ‘도시권(Right to the City)’ 운동의 한국적 경험

〈광주대단지 민권운동 전경〉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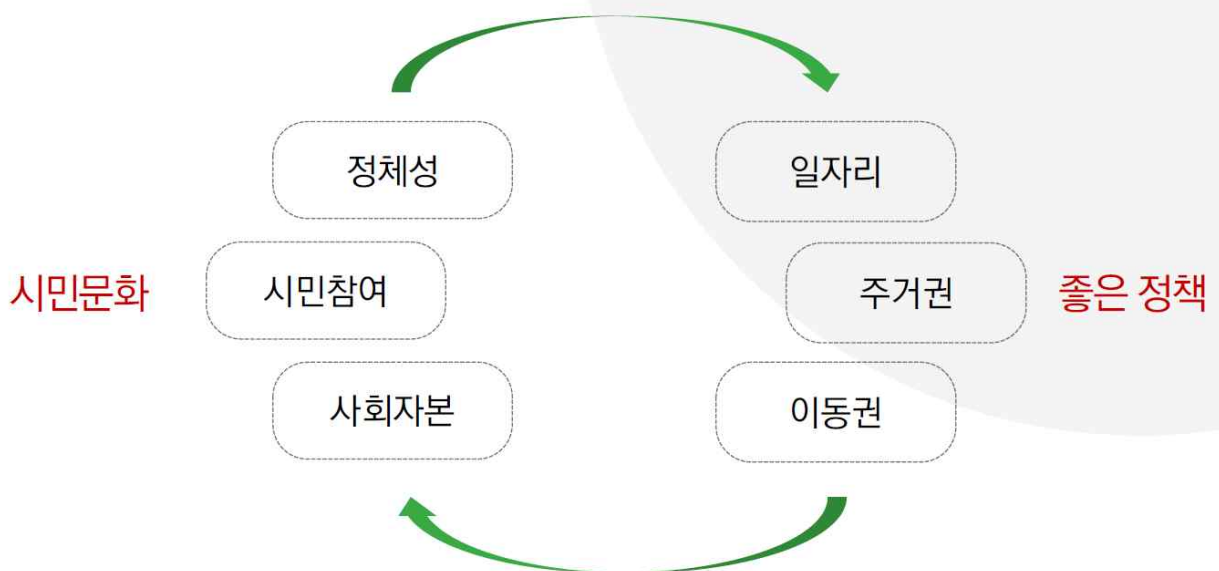
도시정책의 형성과 발전

- 성남은 '정책'으로 조성된 도시
 - ✓ 도시발달과정에서 정책이 어떻게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줌
- 정책의 발달과 도시 형성

시기	수도권 도시문제	성남 관련 정책
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 불량주택 집중 • 서울 주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대단지 조성 • 개발제한구역 지정
80-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광역화 • 주택 수요 급증 • 광역 인프라 수요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 2기 수도권 신도시 (분당, 판교) 건설 • 광역 인프라 확충
200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수요 대응 • 4차 산업혁명, ICT 산업 성장 • 원도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교 테크노벨리 조성 • 도시재생사업

17

성남의 공유자산



18

성남의 공유자산

‘시민’과 ‘정책’이 성남의 자산 → 기억의 재구축과 공유



도시계획이 도시의 자산이 된 미국 포틀랜드



UN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 시민과 정책을 강조

19

감사합니다.

...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광주대단지와 도시의 미래

토론문

경계에서 중심으로

정상훈 교수(가천대학교)



경계에서 중심으로

정상훈 교수(가천대학교)

슬럼 연구로 저명한 Mike davis의 planet of slums 책에서 한국에 대해 언급하기를 “강제퇴거가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이루어진 나라”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례가 없는 수준의 빠른 도시인구 증가가 있었고 비슷한 수준의 도시화 속도를 기록한 나라들은 대부분 대규모의 슬럼지역이 도심과 붙어서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슬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생기는 족족 공권력이 파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걸보기에는 깔끔한 공간이 조성이 되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당한 희생, 공권력의 남용 문제, 그리고 그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록되고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발제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갓난아기를 삶아먹었다는 건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은 치위버리는 공권력의 남용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광주대단지 그 당시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외곽지역입니다. 도시정치학에서는 중앙으로부터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그대로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다가 저 외곽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강남개발도 완성되기 이전이라 강남도 허허벌판일 때 세상의 끝단에 버려진 분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조성된 타운을 Resettlement town (재정착촌)이라고 하는데, 브라질의 재정착촌을 배경으로 한 영화 “city of god” 을 보시면 재정착촌에서 일어나는 잔인무도한 범죄와 치안 공백 상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오늘 발제를 보면서 그 실상들을 좀더 확인하게 되었고, 성남에서 도시계획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공부하면서 성남에 있는 학교에 있는 것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이한 도시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연발생적인 도시조직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신도시로 조성된 땅들입니다. 60년대 광주대단지, 90년대 분당, 2000년대 판교로 이어지는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발시기의 차이입니다. 분당 판교는 10여년차로 개발된 반면, 성남구시가지와 분당은 약 2,30년차로 그 시기적 차이가 크고 그만큼의 간극이 크게 존재합니다. 분당사는 사람 중 성남 산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분당은 강남의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체지로 개발되었고, 판교는 강남을 능가하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분당, 판교와 구성남 사이는 그린벨트가 있어 물리적으로도 확실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곳 성남시청이 딱 그 중간지점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대단지 시절 성남 원도심 지역은 세상의 끝단,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남이 개발되고, 판교가 신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이 지역은 더 이상 경계지역이 아닌 성장의 중심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관련 수요조사를 해보면 성남은 모든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곳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부의 중심이 확실히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원도심 지역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도시서비스와 이야기를 갖추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공간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쌓여있는 공간이 좋은 공간입니다. 역사가 축적되고 시민들의 발자취가 겹겹히 쌓인 공간이 좋은 공간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꼭 청계천 답사과제를 내주는데 숙제로 전태일박물관을 꼭 가보라고 합니다. 답사리포트를 보면 전태일 박물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많고 방문한 것을 만족해합니다. 그 공간에서 살아왔던 치열한 삶의 흔적이 그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대단지는 지금 이렇게 발전된 성남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발제해주신 바와 같이 다양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스토리를 쌓아가는 것이 성남의 장소성을 확립하고 미래에 더 살기좋은 성남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광주대단지와 도시의 미래

토론문

광주대단지 사건의 재해석과 과제

하동근 위원장(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광주대단지 사건의 재해석과 과제

하동근 위원장(광주대단지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그동안 8.10 광주대단지 사건의 재해석 과정은 사건의 성격규명에 집중되어 기념의 의미가 취약해 보이는 측면이 있었다. 그것은 ‘난동’, ‘폭동’ 등의 이름으로 절대타자에 의한 강제적 성격규정이 사건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당연한 결과로 사건과 사건주체들을 소외시킨 저간의 사정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지역주체들에 의한 왜곡의 해소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급기야 사건의 의미 찾기로 기념의 내용과 형식이 축소되어버린 측면을 부정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물론 사건당사자나 사건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의 정부기관에의 제기, 광주대단지 개발의 도시공간왜곡과 그 결과 성남시 도시공간정책에의 장애로 작용하고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도시재개발에 대한 주택공사 측의 보상적 시혜요구와 내락 등의 현실적 접근도 부족하지만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

이제 50주년을 계기로 사건의 재해석을 시민주체화와 도시 비전과의 연계로 모색 지점을 확장시켜보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사건이 현재를 사는 성남시민들에게 갖는 의미를 찾고 그 의미로 공동기억의 기반을 만들어 새로운 도시를 꿈꾸는 의미망을 구축해 보자는 제안일 터이다. 역사 텍스트 안에 갇혀 있던 사건이 도시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사건의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도시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미래의 꿈으로 연계되는 작업들은 사건의 의미체계 구축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묶어내는 의미망 구축은 사건을 가장 건강하고 효과적이고 필요한 기념방식이 될 것이다. 50주년의 사업들은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의미체계를 실용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성급하게 혹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건의 성격에 대한 무리한 보편화는 권력의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개연성이 농후하고 또한 성급한 역사화는 사건자체의 중핵을 은폐시켜 전혀 다른 사건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조명래 장관이나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과 박세훈 선임연구원이 제안하고 있는 도시권 개념을 통한 8.10사건의 재해석과 도시정체성 모색, 그리고 긍정과 주체적,

지역적 미래상을 그려내는 작업 전체는 사건의 의미체계 구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시권의 관점에서 사건을 살핀다는 방식의 도입자체가 사건해석의 폭을 넓히고 도시정체성과 미래의 구상까지 연결되는 의미체계로서의 접근 방법을 제안했다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도시권적 의미체계는 몇 가지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숙제가 남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권의 시각이 당시의 상황을 ‘도시권리가 거부된 도시의 모습’으로 서술하고, 따라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쟁취’가 8.10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는 규정에는 무언가 규정되지 못한 잔여물이 남는다는 느낌이 든다. 도시생활과 관련된 권리가 포괄된 도시권 개념이 생활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상황을, 즉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절명의 상황을 도시권이라는 약간은 관념적이고 그 스펙트럼이 넓은 해석 틀 안에 보편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죽음을 초래하는 ‘국가폭력’의 상황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사유할 여유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참여주체와 관한 문제가 있다. 도시권적 주체는 ‘작품으로서의 도시에 대한 권리’로서 전유와 참여의 권리를 요구하고, 도시 중심부에 대한 권리, 차이의 권리와 정보의 권리, ‘도시적 사회의 능동적 권리주체’로서의 도시거주자의 권리주체이다. 도시권주체는 그러므로 도시적 가치를 내재화하고 참여 지향적 ‘행위주체(행위자)’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8.10 사건의 주체들은 도시권적 요구보다는 생존을 위한 조건들, 즉 집과 물과 양식이 절박할 뿐 아직 도시공동체를 고민하고 도시 권리를 추구할 여유들을 가지지 못한 주체들이다. 이들은 지속적인 방식으로 권리회복을 위한 치밀한 전략아래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위자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싸움의 형식이다. 도시권 주체들의 투쟁형식은 담론적 이고, 의식적이며 될 수 있는 한 합법의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소득도 일종의 도시권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면 기본 소득을 요구하는 투쟁형식에서 과격한 방식의 도입은 감성적으로 미학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8.10 주체들의 싸움방식은 의식적이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보이고, 극한적 분노를 거침없이 표출하고 합법여부를 고민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사건을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 한다면 이 사건은 병리적 증상으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두를 잘살게 해주겠다는 ‘조국 근대화’, 국가는 국민을 보호

한다는 국가담론, 정치는 국민과 소통한다는 정치담론,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라는 등등의 상징질서를 철석같이 믿어왔던 단지 민들에게 근대화는 그들의 죽음과 배제를 통하여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고, 국가가 그들을 제외한 국민을 보호하고 단지 민들의 자유는 일할 수 있는 자유도 없는 오직 죽을 자유만이 부여된 전도된 자유라는 사실이 전매금지 공고와 10일 서울시장의 배반으로 확실해졌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면서 싸움은 국가폭력에 대한 대항 폭력으로 변한다. 여기서 이성은 비이성으로 넘어간다.

도시권 의미체계는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시사지점을 제공하지만 아직 시론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여진다. 위에 기술한 문제점들을 천착하고 해결지점들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제되고 어우러지는 의미체계가 나오리라고 믿는다.

...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광주대단지와 도시의 미래

토론문

광주대단지사건의 세 가지 해석학적 지평에 대한 종합적 검토

김백영 교수(서울대학교)



광주대단지 사건의 세 가지 해석학적 지평에 대한 종합적 검토

김백영 교수(서울대학교)

1. 문제제기

- 1971년 8월 10일 일어난 광주대단지사건은 어떤 역사적 의미를 띠는 사건인가? 오늘날 우리는 그 사건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 것인가? ‘난동/폭동’으로 의미화되고 ‘난폭한 사람들의 도시’ 혹은 ‘범죄자들의 도시’로 이미지가 재생산되어 한국 현대사의 공식적 기억 속에서 망각되어온 이 사건의 기억을 공식적으로 되살린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띠는가?
-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 네 분 선생님의 발표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그 함의를 제시하고 있음. 조명래 선생님 기조발표는 도시인권운동으로서의 근원적/보편적 의의에 대해, 임미리 선생님의 발표는 저항운동사의 관점에서 그 사건이 전개되고 기억되어 온 방식에 대해, 김민환 선생님의 발표는 현대 한국의 집합기억의 역사 속에서 그 사건이 지닌 독특성에 대해, 박세훈 선생님의 발표는 성남시의 도시형성사 속에서 그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함.
- 이상의 발표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한 시공간적 맥락성을 띠는 사건. 그 현재적 함의를 도출해내려면 행위(자), 공간(성), 시간(성)이라는 삼원적 요소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사, 도시·지역사, 그리고 정체성과 기억의 역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독특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행위자 차원: 국가 단위의 대서사로 통합되기 어려운 소수자 저항/타협의 사례

- 광주대단지사건은 광주대단지의 3만 명(혹은 5만 명)의 주민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철거민)과 불하가격 및 각종 세금(일반입주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면서 관공서와 관용차 등을 파괴, 방화, 훼손한 사건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난동사건’, ‘주민폭동’으로, 다

른 한편으로는 민중항쟁, 민중항거, 생존권투쟁으로 규정되어왔다. 정반대의 함의를 갖는 해석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의미론적으로 ‘통합/결합’ 되지 못한 채 ‘병존/양립’ 해온 현상. 그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어떤 사회적 결과를 초래했는가?

3. 공간적 차원: 수도권(서울대도시권) 압축도시화의 축약본으로서 성남시 형성사

- 광주대단지, 분당개발, 판교개발, 위례신도시 개발로 이어져온 성남의 도시공간 재구조화는 파행적 도시개발의 연속. 광주대단지사건은 그 이후 제기된 성남시의 각종 도시문제의 근원적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현재진행형 사건. 도시공간의 왜곡된 팽창과 도시내부의 불균등발전, 토지와 주택가격의 심각한 불균형, 파행적 도시공간 재편(도시의 전면적 재개발과 신도시 건설), 교통문제, 비합리적 사회간접시설, 공간적 경계이면서 문화적 경계로 이분화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장벽문제 등.
- 구시가지는 성남시 전체 면적의 9.3%에 불과함에도 그곳에 성남시 전체 인구의 90%가 거주. 구시가지의 공간문제를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은 분당지역으로의 분산이었음에도 정부는 1975년 5.4조치를 통해 구시가지 이외의 모든 토지의 개발을 제한. 이후 노태우 정부는 강남의 아파트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분당신도시를 건설(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 이어서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의 개발이 이어지면서 구시가지의 공간문제 해결은 난망하게 됨.

4. 집합기억과 정체성의 차원: 지역-국가-글로벌 차원의 중층성/복합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압축근대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단국가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과 연관. 한국은 단기간에 극빈국에서 개도국을 거쳐 선진국 지위로 올라선 세계사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성공한 사례. 따라서 현대 한국의 급격한 사회변동(‘압축근대화’) 과정에서의 발생한 무수한 갈등구도는 대체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적 달성이라는 발전주의적 서사 속에 적절히 봉합.
-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단위의 구심적 서사 속에서는 큰 모순 없이 봉합된듯한 외양을 띠고 있으나, 실제 각 사건이 발발한 지역 단위 맥락에서는 여

전히 개별 사건마다 다른 방식으로 존재. 예컨대 제주 4.3과 6.25전쟁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인식/재현/명예회복/기념 간의 차이와 모순. 4.19와 5.18을 기념하는 공식화된 거대서사와 공식화되지 못한 역사적 실체 간의 괴리(사건의 동등한 참여자/희생자임에도, 재현/기억과정에서 과잉대표화된 학생/지식인과 과소대표화된 도시빈민/부랑자 간의 간극). 또는 국가적 기억과 지역적 기억 간의 괴리(역사적 기억이 선별되고 발명된 서대문형무소와 옥바라지골목의 사례).

5. 결론

- 행위자 측면: ‘싸우면서 건설’ 하던 김현옥 시장기 서울의 전투적 도시개발방식, 보편적 인권의식이 부재했던 군사독재정권의 사회적 풍토, 도시계획의 제도적/정책적 상식이 부재했던 도시행정의 관행. 이러한 조건 속에서 (4.19혁명 10여년 이후에 일어났음에도) 도시최하층계급을 대하는 군사정권의 야만성이 드러난 사건. 국가적 차원의 ‘압축근대’ 성공담론 속에 포섭되지 못하고 지역 차원의 흑역사로 묻힌 사건.
- 공간적 측면: 서울대도시권 형성사를 3단계로 구분하자만, 1단계인 강북 사대문안 구도심 정비사업의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이자, 이후 2단계인 한강 이남(강남) 개발을 豫期한 사건. 또한 3단계인 80년대말 이후 수도권 팽창 과정의 결과로 오늘날의 성남시가 형성. 서울에서 추방된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의미론적인 소외. 성남시 형성의 기원적 사건이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수도권(서울대도시권) 도시빈민사의 전반적 맥락 속에서 재조명 필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도시형 재난/참사의 기념이나 희생자 추모조차 억압해온 압도적 개발주의 패러다임의 비문명성/반인륜성에 대한 고발 필요.
- 시간적 측면: 이러한 다층적 차원에서 지난 반세기 한국사회가 경험한 ‘압축근대’를 단지 성공신화라는 밝은 면에서만이 아니라, 그 어두운 뒀안길에 소외되고 희생된 소수자들의 역사를 되짚어봄으로써 한국의 ‘압축근대’ 인식에 있어서 균형감각을 확보할 필요가 절실함.
-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한 편견, 왜곡된 기억 또는 기념의 결여/지연이라는 현상은 이러한 여러 지평간 인식의 괴리에서 초래된, 한국사회의 압축근대에 대한 자기인식의 미성숙성을 드러내는 징후적 현상. 이 사건의 현재적 함의는 행위자/시간/공간이라는 다차원적 관점, 지역/국가/글로벌이라는 다중스케일적 인식의 종합적 지평 속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

...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광주대단지와 도시의 미래

토론문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한 반성과 미래제언

이상대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한 반성과 미래제언

이상대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 성남 50주년 기념 및 성남 비전 토론회의 의의

- 광주대단지로부터 시작된 성남의 성장은 한국 도시화의 역사. 특히 철거민 이주로부터 시작된 아프고, 아쉬웠던 도시 역사가, 현재 ‘하늘아래 분당’ (?), ‘일자리 8만여개’의 판교를 가진 성남은 자랑할 만한 도시의 역사임
- 지난 50여년간 만들어왔던 도시 역사 이후, 앞으로 50년의 새로운 도시 성장과 시민 성장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면 새로운 정책 비전, 시민 비전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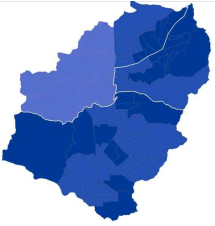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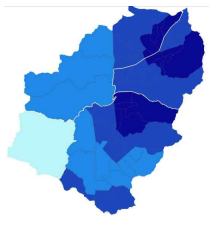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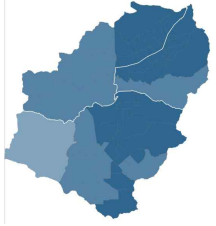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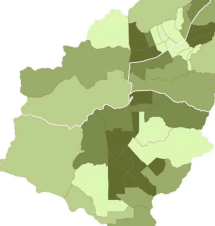
□ 광주대단지 사건과 반성

- 광주대단지 사건과 기억 과제? 이주민들이 주택을 만들고, 오늘날의 중원구와 수정구를 만들어 온 것은 차별, 배제를 딛고 만들어진 영광의 역사.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부각되었으면 함
- 새롭게 발굴, 기억해야 할 것들? 1971년의 광주대단지 조성이 1992년 분당 신도시 건설 시 어떤 시사점, 어떤 제안이 이뤄졌고, 그 중 반영된 것은 무엇인지를 조사분석할 필요
- ‘단건’의 정책과 도시 조성에 대한 반성 : ‘선견지명’ 정책과 도시비전 만들기의 중요성
 - 광주대단지 이주 시 철거민 20평, 세입자 8평 규모 → 이후 최저주거수준, 국민 평형제도 도입
 - 현대적 도시 만들기의 개념이 전혀 부재. 정책 지식의 몰이해? vs. 정책 결정자의 무지와 철학 부재? cf. 송파 백제유적의 훼손과 잠실, 송파 아파트 단지화

□ 성남 미래의 새로운 과제

○ 도시 양극화 대응

- 도시 내 양극화는 계층, 지역 등의 여러 측면으로 나타남. 특히 지역 양극화는 지역 차별화(differentiation)와 공공서비스, 부동산 자산가격 등의 상당한 차이를 유발
- 이상대의 2017년 연구 (공공서비스 시설의 거리, 시간 접근성 분석)

접근 소요시간 또는 접근거리			
도서관 소요시간	공공의료기관 소요시간	전철역 소요시간	근린공원 접근거리
			

- 박세훈 발표문에서는 공간통합의 과제를 “지역간 불균형 / 지역간 연계 부족 / 도시 전체의 중심성 부족” 세가지로 제시
-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분당구, 판교 등 매우 이질적인 세구역으로 나뉘지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 더 도시 내 양극화 대응, 공간통합 정책을 중시해야 함
cf. 시카고 시의 ‘근린기회펀드’ (Neighborhood Opportunity Fund)

○ 새로운 도시성장 동력을 발굴, 육성해야

- 시민 복지, 도시 재정은 ‘성장’ 없으면 지속할 수 없음. 결국 새로운 산업경제와 일자리가 나와야
- 현재 성장, 고부가가치산업인 판교의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도 산업성장 싸이클에 따라 성쇠 올 듯
- 성남 미래 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성남시와 성남시 소재 기업, 협회들 간에 일어나야 함

